제337회국회
(정기회)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5년10월19일(월)

장 소 외교통일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예산안
   가. 외교부 소관
   나. 통일부 소관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외교부 소관
   나. 통일부 소관
3. 재외동포기본법안
4. 재외동포청법안
5. 재외동포재단법 폐지법률안
6.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7. 대한민국 정부와 카메룬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8. 대한민국 정부와 미얀마연방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9.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10.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11.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12.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협정 비준동의안
13. 광복70주년 및 분단70주년 기념 한반도 평화통일과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한·미 양국의회 결의안
14. 일본 아베 정부의 '11개 안보관련법 제·개정안' 중의원 강행처리에 대한 규탄 결의안
15. 일본 아베 정부의 11개 안보관련법 제·개정안 강행처리에 대한 규탄 결의안
16.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1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 북한군의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 행위 규탄 결의안
23. 북한의 DMZ 지뢰도발 행위 규탄 결의안
24. 쌀 대북지원 촉구 결의안
25. 한·중 FTA공청회 개최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예산안 ····· 3
가. 외교부 소관
나. 통일부 소관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3
가. 외교부 소관
나. 통일부 소관
3. 재외동포기본법안(김성곤 의원 대표발의)(김성곤・한명숙・박민수・이개호・조정식・김관영・정청래・이목희・황주홍・부좌현・김우남・박남춘 의원 발의) ····· 3
4. 재외동포청법안(양창영 의원 대표발의)(양창영・류지영・김종태・심윤조・이한성・박윤옥・이정현・이종배・김정록・최봉홍・경대수・이철우・김을동 의원 발의) ····· 3
5. 재외동포재단법 폐지법률안(양창영 의원 대표발의)(양창영・류지영・김종태・심윤조・이한성・박윤옥・이정현・이종배・김정록・최봉홍・경대수・이철우・김을동 의원 발의) ····· 3
6.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임내현 의원 대표발의)(임내현・김윤덕・이개호・박지원・김우남・장병완・조경태・정호준・박혜자・이원욱・유인태・조정식・김성곤・윤관석・신계륜・이윤석・정청래・전해철・이한성 의원 발의) ····· 3
7. 대한민국 정부와 카메룬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 3
8. 대한민국 정부와 미얀마연방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 3
9.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 3
10.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 3
11.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 3
12.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협정 비준동의안 ····· 3
13. 광복70주년 및 분단70주년 기념 한반도 평화통일과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한・미 양국의회 결의안(나경원・김태원・양창영・김상훈・문대성・이주영・강창희・김성찬・서용교・홍철호・길정우・이재영・김세연・정희수・이자스민・안홍준・조명철・안효대・이진복・김영우・강석훈・이종배・홍문표 의원 발의) ····· 4
14. 일본 아베 정부의 '11개 안보관련법 제・개정안' 중의원 강행처리에 대한 규탄 결의안(이원욱・배재정・이개호・김기준・최원식・전정희・박홍근・박지원・양승조・임내현・강창일・김상희・전순옥・김현・장병완・최동익・유성엽・김성곤・이만우・최민희・김윤덕・강기정・박혜자・김영록・이우현・황주홍・신경민・유기홍・김민기・박수현・홍종학・최재성 의원 발의) ····· 4
15. 일본 아베 정부의 11개 안보관련법 제・개정안 강행처리에 대한 규탄 결의안(이원욱・박병석・강창일・장하나・정세균・이개호・부좌현・김민기・안규백・정청래・유성엽・민병두・박홍근・박지원・서기호・이춘석・김기준・전순옥・강기정・김용익・오영식・은수미・최민희・박완주・신경민・우원식・유은혜・임수경・김성주・최재성・최원식・김윤덕・홍종학・전해철・배재정・임내현・최동익・박광온・박민수・신정훈・노영민・김현 의원 발의) ····· 4
16.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도종환・박광온・전순옥・이개호・황주홍・안규백・백군기・김성곤・강동원・인재근 의원 발의) ····· 4
17.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박주선・김승남・윤관석・이원욱・김영록・박광온・김기식・박홍근・김춘진 의원 발의) ····· 4
18.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길 의원 대표발의)(김한길・노웅래・이개호・조정식・김성곤・박영선・강동원・신경민・안규백・민병두・문희상・정세균・김윤덕・원혜영・심재

권 의원 발의) ····· 4
1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박광온·신기남·도종환·진선미·원혜영·이해찬·인재근·이종걸·문병호·장하나 의원 발의) ····· 4
2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원혜영·정세균·이개호·김윤덕·이해찬·신경민·심재권·안규백·김성곤·민홍철·남인순 의원 발의) ····· 4
2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4
22. 북한군의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 행위 규탄 결의안(이종걸 의원 외 128인 발의) ····· 4
23. 북한의 DMZ 지뢰도발 행위 규탄 결의안(원유철 의원 외 158인 발의) ····· 4
24. 쌀 대북지원 촉구 결의안(최규성·유승우·전정희·이목희·김승남·이인제·신정훈·김영록·유성엽·김우남·주승용·설훈·김관영·임수경·김윤덕·박민수·인재근·조정식·이상직·이인영·노영민 의원 발의) ····· 4
25. 한·중 FTA공청회 개최의 건 ····· 4

(14시11분 개의)

○위원장 나경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국회(정기회) 제2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비롯하여 법안 및 비준동의안 등 신규 안건에 대한 심사와 함께 한·중 FTA공청회 개최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 오늘 의사일정으로 예정된 25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고 의안에 대해서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일괄하여 대체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무위원 불출석과 관련하여 안내말씀드리면, 홍용표 통일부장관이 이산가족상봉단 방북 환송을 위해 불출석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

1. 2016년도 예산안
가. 외교부 소관
나. 통일부 소관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외교부 소관
나. 통일부 소관
3. 재외동포기본법안(김성곤 의원 대표발의)(김성곤·한명숙·박민수·이개호·조정식·김관영·정청래·이목희·황주홍·부좌현·김우남·박남춘 의원 발의)
4. 재외동포청법안(양창영 의원 대표발의)(양창영·류지영·김종태·심윤조·이한성·박윤옥·이정현·이종배·김정록·최봉홍·경대수·이철우·김을동 의원 발의)
5. 재외동포재단법 폐지법률안(양창영 의원 대표발의)(양창영·류지영·김종태·심윤조·이한성·박윤옥·이정현·이종배·김정록·최봉홍·경대수·이철우·김을동 의원 발의)
6.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임내현 의원 대표발의)(임내현·김윤덕·이개호·박지원·김우남·장병완·조경태·정호준·박혜자·이원욱·유인태·조정식·김성곤·윤관석·신계륜·이윤석·정청래·전해철·이한성 의원 발의)
7. 대한민국 정부와 카메룬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8. 대한민국 정부와 미얀마연방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9.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10.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11.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12.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협정 비준동의안

13. **광복70주년 및 분단70주년 기념 한반도 평화통일과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한·미 양국의회 결의안**(나경원·김태원·양창영·김상훈·문대성·이주영·강창희·김성찬·서용교·홍철호·길정우·이재영·김세연·정희수·이자스민·안홍준·조명철·안효대·이진복·김영우·강석훈·이종배·홍문표 의원 발의)
14. **일본 아베 정부의 '11개 안보관련법 제·개정안' 중의원 강행처리에 대한 규탄 결의안**(이원욱·배재정·이개호·김기준·최원식·전정희·박홍근·박지원·양승조·임내현·강창일·김상희·전순옥·김현·장병완·최동익·유성엽·김성곤·이만우·최민희·김윤덕·강기정·박혜자·김영록·이우현·황주홍·신경민·유기홍·김민기·박수현·홍종학·최재성 의원 발의)
15. **일본 아베 정부의 11개 안보관련법 제·개정안 강행처리에 대한 규탄 결의안**(이원욱·박병석·강창일·장하나·정세균·이개호·부좌현·김민기·안규백·정청래·유성엽·민병두·박홍근·박지원·서기호·이춘석·김기준·전순옥·강기정·김용익·오영식·은수미·최민희·박완주·신경민·우원식·유은혜·임수경·김성주·최재성·최원식·김윤덕·홍종학·전해철·배재정·임내현·최동익·박광온·박민수·신정훈·노영민·김현 의원 발의)
16.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도종환·박광온·전순옥·이개호·황주홍·안규백·백군기·김성곤·강동원·인재근 의원 발의)
17.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박주선·김승남·윤관석·이원욱·김영록·박광온·김기식·박홍근·김춘진 의원 발의)
18.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길 의원 대표발의)(김한길·노웅래·이개호·조정식·김성곤·박영선·강동원·신경민·안규백·민병두·문희상·정세균·김윤덕·원혜영·심재권 의원 발의)
1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박광온·신기남·도종환·진선미·원혜영·이해찬·인재근·이종걸·문병호·장하나 의원 발의)
2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원혜영·정세균·이개호·김윤덕·이해찬·신경민·심재권·안규백·김성곤·민홍철·남인순 의원 발의)
2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2. **북한군의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 행위 규탄 결의안**(이종걸 의원 외 128인 발의)
23. **북한의 DMZ 지뢰도발 행위 규탄 결의안**(원유철 의원 외 158인 발의)
24. **쌀 대북지원 촉구 결의안**(최규성·유승우·전정희·이목희·김승남·이인제·신정훈·김영록·유성엽·김우남·주승용·설훈·김관영·임수경·김윤덕·박민수·인재근·조정식·이상직·이인영·노영민 의원 발의)
25. **한·중 FTA공청회 개최의 건**

(14시13분)

○**위원장 나경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한·중 FTA공청회 개최의 건까지 25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인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 측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병세 외교부장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존경하는 나경원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6년도 외교 추진 방향과 함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외교부 업무에 늘 따뜻한 성원을 베풀어 주신 바와 같이 내년도 외교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내년도 예산안의 기초가 되는 2016년도 외교 추진 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주요 외교목표를 일괄해서 보실 수 있도록 자료 1쪽에 도표를 통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국제적으로 종전 70주년이자 한반도에서는 광복 및 분단 70주년인 올해 동북아와 글로벌 차원

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다양한 도전이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내년에도 한반도, 동북아 및 글로벌 차원에서 올해 못지않게 복잡다기한 외교안보 환경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외교부로서는 지금까지와 같이 국익을 최우선하면서 전략적 사고와 균형감각을 가지고 주요 외교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인식하에 내년도 주요 분야별 추진 방향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2쪽, 주변국 외교입니다.

지난주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는 한미동맹의 역사에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방미 전 목표했던 분야들에 있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둔 만큼 앞으로 한미 양국의 포괄적 전략동맹이 더욱 심화 발전되도록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북핵·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이번에 합의된 바와 같이 북핵문제 해결에 최고의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미국과의 전략적 공조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 의미있는 비핵화 대화를 위해서 한미 양국이 중국 및 여타 당사국들과의 공조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번에 채택된 현안 공동설명서 'Joint Fact Sheet'에 잘 드러나 있는 바와 같이 한미 안보 동맹 강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 외교·국방 2+2 회담 등 안보 분야의 고위급 협의도 더욱 강화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양국 실질협력 분야에 있어서도 다양한 합의들이 이루어졌습니다.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가 조만간 재출범될 예정이며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의 발효를 통해서 원자력 고위급 위원회도 가까운 시일 내에 가동될 예정입니다.

기존의 안보 분야 고위급 전략협의에 이어 경제 및 원자력 협력 분야의 고위급 전략대화가 본격 가동됨으로써 양국 간 전방위적인 고위급 협의채널이 활성화될 예정입니다.

한편 한미 FTA의 호혜적인 발전 노력을 지속하는 가운데 TPP 참여 문제 관련 국내 검토도 차분히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금번 한미 정상회담은 포괄적 글로벌 동맹에 걸맞게 양국 간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개척하고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한미 우주협력협정을 가능한 조속히 체결하고 양국 대통령실 간 사이버 협력채널을 통해 사이버 안보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보 교류, 군사협력 및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 등 분야에 있어서도 진전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협력지평 이외에도 PKO, 비확산, 핵안보,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과 같은 기존 협력 분야에 있어서도 양국 간 협력과 국제무대에서의 공조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미측은 이번에 우리의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 구상과 미측의 'Let Girls Learn' 구상을 연계시키는 데 커다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를 포함해서 글로벌 어젠다 관련한 양측의 구상들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공조를 더욱 강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양국 간 인적 교류 및 정책 중심 공공외교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내년은 미국이 대선 국면에 본격적으로 접어드는 만큼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및 정책 중심 공공외교를 특히 강화시키고자 합니다.

중국과는 여섯 차례에 걸친 정상회담 성과를 토대로 이미 가동 중인 4개의 전략대화 채널을 활성화하여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계속 내실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북한 비핵화 및 평화통일 기반 구축 등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중국이 북한에 대해 건설적인 영향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외교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일본과는 역사 인식 등 과거사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단호하고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전략적·호혜적 사안에 있어서는 공조 및 협력을 지속하는 투트랙 전략을 견지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베 총리가 전후 70년 담화에서 밝힌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은 흔들림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 진정성 있는 행동을 통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북핵 문제 등 전략적 사안에 대해서는 한일, 한미일 간 공조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조만간 우리 주도로 개최되는 한·일·중 3국 정상회담은 지난 3년간 공전된 3국 협력체제의 복원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리더십을 미국

등 국제사회가 높이 평가하고 있는 만큼 3국 협력체제의 모멘텀이 잘 이어지도록 금번 정상회담에서의 합의사항을 잘 관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북핵 및 통일외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6쪽입니다.

금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측은 그간 북한의 전략적 도발을 효과적으로 억지해 온 것은 튼튼한 한미동맹의 중요한 성과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앞으로도 북한의 전략적 도발 가능성에 대비한 한미 방위안보 태세를 확고히 견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기초하여 북한이 의미 있는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 나오도록 북한의 전략적 셈법을 변화시키기 위한 압박과 대화라는 투트랙 노력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한미 양측은 날로 심각해지는 북핵 고도화와 함께 이란 핵 합의 이후 북핵 문제에 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커진 상황을 감안하여 북핵문제 해결에 최고의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한미일·한중일 등 기존의 채널에 중국과의 협력을 더함으로써 3자 외교가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추가적인 통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공조와 관련해서 내년에는 IAEA 핵안보 각료급회의 의장국을 수임하는 한편 원자력공급국그룹(NSG) 및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와 같은 원자력 및 미사일 관련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의장국을 수임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국제기구 및 레짐과의 협력 그리고 유엔 안보리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 북한의 전략도발 억지와 비핵화를 위한 대북 압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내일부터 실시될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포함하여 대북 인도적 협력사업도 진행해 나감으로써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선순환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분단 70년인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한반도 평화통일의 기반 구축을 위한 통일외교를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 그리고 한·EU 정상회담 등 양자 및 다자 정상외교를 통해서 우리의 평화통일 노력에 대한 공감대와 지지를 확산시켜 왔는데 내년에도 다양한 양자·다자외교 일정을 적극 활용하여 통일외교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독일 및 비세그라드 그룹 등과 통일과 체제전환 관련 경험을 다양한 채널에서 공유해 나가는 한편 해외 체류 탈북민의 안전한 국내 이송을 위한 유관국과 국제기구와의 협조체제를 업그레이드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8쪽, 지역 협력외교입니다.

박근혜정부의 주요 외교정책인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은 지난 9월 한·EU 정상회담에서 EU 상임의장의 명시적 지지에 이어서 이번 방미 시 오바마 대통령의 분명한 환영 표명에 따라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작년에 이어 다음 주 개최되는 제2차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정부 간 협의회는 주요국 참석자의 수준이 지난해에 비해 격상되었으며 원자력 안전, 보건안보, 재난구호 등 7개 기능별 협력사업에 있어서도 갈수록 내실 있는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동평구에 대한 참여 수준을 격상시키고 분야별 실질적 진전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관련해서 지난 7월 유라시아 친선특급의 성공을 통한 모멘텀을 적극 살려 나가겠습니다.

나진-하산 물류사업 등 남·북·러 3각 협력사업을 활성화시키는 한편 중앙아 지역과의 협력 제도화의 일환으로 한·중앙아 협력사무국 설립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점차 국제사회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북극 및 북극해 지역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서 북극이사회 활동도 적극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외교에 있어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글로벌 중견국 외교입니다.

자료 9쪽입니다.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께서 참석하신 유엔총회는 창설 70주년을 맞아 유엔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개최되었습니다.

대통령께서 개발정상회의·새마을운동·유엔평화유지활동 등 7개 정상급 회의에 참석하여 인류애를 향한 한·유엔 간 파트너십을 주제로 글로벌 어젠다에 있어 우리의 기여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금번 유엔총회 참석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 높

아진 우리의 위상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으며 유엔의 3대 목표인 국제평화, 개발 및 인권 분야에 있어서 우리의 역량과 경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커다란 기대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먼저 국제평화와 관련 대통령께서는 국회 및 유엔과의 협의를 통해서 PKO에 공병부대를 추가 파견하고 아프리카연합을 통한 의료시설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여 회원국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유엔과 미국은 평화유지활동에 있어 우리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는 만큼 우리의 공약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개발 분야에 있어서 지난달 채택된 2030 지속가능개발목표(SDG)는 유엔 역사상 빈곤 퇴치를 위한 가장 야심찬 목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개발에 있어 가장 모범적인 성공 사례인 우리로서는 SDG 이행에 있어 능동적인 기여를 해 나가야겠습니다.

특히 SDG 이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관인 경제사회이사회 의장국으로서 SDG 이행 원년에 우리의 리더십 발휘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성숙한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 지난 9월 글로벌보건안보구상 고위급회의 계기에 발표한 '모두를 위한 안전한 삶' 구상 및 지난달 유엔총회 계기 개발정상회의에서 발표한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 이니셔티브의 이행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인권 및 인도적 지원 분야에 있어 박근혜 정부의 새로운 외교 브랜드인 인도주의 외교가 정책적 우선순위로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최근 국제사회에 최대 현안 중 하나로 대두된 시리아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코자 합니다.

현재 우리 정부는 UNHCR 집행이사국이자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활동 중인 만큼 난민 문제와 대규모 재난에 대한 우리의 인도주의적 기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한편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동안 글로벌 네트워크 확충에 있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만큼 내년에도 이러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 주도로 설립된 지역 간 중견국 협의체 믹타(MIKTA)의 경우 지난 7월 우리 국회의장 주도로 믹타 국회의장회의가 개최되는 등 협력채널 다변화와 함께 국제사회에서의 가시성도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멘텀을 살려서 오는 11월 G20 정상회의 계기 믹타 정상 간 최초 회동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외교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6쪽입니다.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가운데 광역 FTA 설립을 통한 경제·통상 분야에서의 경쟁이 심화되는 국제경제 환경하에서 정상외교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해외사업 수주, 기업애로 해소 등 능동적 경제외교를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TPP 참여 문제에 대한 정부 내 논의에 참여하고 주요국과의 양자 협의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금년 말 수립될 예정인 신기후체제는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을 수반할 예정인 만큼 국제경제 및 에너지시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최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의장 당선과 우리나라가 이미 유치하고 있는 GCC, GGGI 유치국으로서 기후변화 외교에 있어 리더십을 발휘해 나가고자 합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 중 재외국민 안전·권익 보호, 공공외교 부문은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료 22쪽에 있는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외교부 예산은 금년 대비 4.7%, 965억 원이 증액된 2조 140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 외교부 예산이 사상 최초로 2조 원 규모에 진입한 이래 다양한 필수 외교 수요를 반영하여 2016년 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인건비와 기본경비는 각각 2917억 원과 2173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국제기구분담금은 전년 대비 4.7% 증가한 4612억 원, ODA는 전년 대비 2.7% 증가한 696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제기구분담금과 ODA를 제외한 기타 사업비는 4557억 원으로 전년 대비 7.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제교류기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한 여유자금의 회수기간 도래로 인하여 2015년 708억 원 대비 390억 원이 증가한 1098억 원입니다만 여유자금을 제외한 총지출은 487억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원 감소, 0.4% 감액된 모습으로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증감 내역은 배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6년 외교부 예산안 주요 역점추진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3쪽입니다.

먼저 정책·문화 공공외교 확충입니다.

문화 공공외교를 통한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강화시키는 한편 우리의 핵심 외교정책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제고시키는 노력을 적극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북미와 동북아 국가와의 전략적 협력관계 예산을 확대하는 한편 우리의 외교정책에 대한 국제적 지지 확산을 위해서 공공외교 역량강화 예산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범정부 차원에서 공공외교를 보다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공공외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 제정을 추진 중이며 내년 중 공공외교대사·정책공공외교담당관 등 관련 조직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재외국민 보호 강화 및 재외공관 안전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재외국민의 안전 제고를 위해 영사콜센터의 서비스 기능을 양적·질적으로 지속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내일 영사콜센터 개소 10주년 행사가 예정돼 있는데 동 센터는 서비스 품질지수 9년 연속 최우수 정부콜센터로 선정될 정도로 재외국민 안전을 위한 탁월한 기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동 센터가 계속해서 선진 일류 콜센터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범국가적 테러·지진 등 대형 재난 발생 시 재외국민의 안전한 귀국을 지원하는 전세기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급증하는 해외사건·사고에 대한 재외공관의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서 사건·사고 담당 영사 보조인력 예산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이라크의 불안한 정세를 고려하여 이라크 공관을 그린존 내로 이전하는 사업을 재개하도록 하였으며 보안 CCTV 개선, 방탄차량 보급도 확대하여 공관원 안전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앞서 보고드린 글로벌 중견국 외교 강화를 위한 기여 확대를 위해 국제기구분담금 및 ODA도 2015년보다 확대하여 국제사회에서의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국격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자료 25쪽에 반영된 동북아평화협력구상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 주요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예산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보고드린 다양한 외교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인적·물적 외교 인프라의 확충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외교부 예산은 정부예산 대비 0.81% 수준으로서 OECD 회원국 평균인 1.6%의 절반 수준이며 인력 등 각종 외교 인프라도 열악한 상황입니다.

외교부는 2016년에도 재외공관 행정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처우 개선을 통해 우수 인력을 확보하고 교육훈련 강화를 통해서 직무 능력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외공관에서 운영 중인 외교정보 전용망의 일부 저속 전용회선을 증속하여 외교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외교부 예산이 규모 면에서 여전히 정부 전체 예산에서 매우 적은 비중이지만 다양한 외교 수요를 담아내는 효율적인 예산안을 편성코자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외교부가 국익을 대변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위상을 강화해 나가는 데 필요한 예산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경원 외교부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25항 한·중 FTA공청회 개최의 건을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어 계류 중인 한·중 FTA에 대하여 국회법 제64조에 따라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간사 위원 간 협의하에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공청회 개최 계획안에서와 같이 한·중 FTA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을 감안하여 두 차례에 걸쳐 공청회를 실시하되 10월 23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제1차 공청회는 협정 내용, 영향 및 활용방안에 대하여, 10월 26일 월요일 오후 2시로 예정된 2차 공청회는 보완대책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

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술인은 간사 위원으로부터 각각 2인씩 추천받아 4인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공청회 개최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계획안과 같이 한·중 FTA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황부기 통일부차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차관 황부기 존경하는 나경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6년도 통일부 소관 예산안 및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통일부는 올 한 해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기조를 일관되게 견지하는 가운데 남북 간 실질적 협력의 통로를 열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북한의 도발·위협과 비방·중상 등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면서 남북관계의 발전과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동시에 대내외의 통일 공감대를 확산하고 통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당면해서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에서 이루어진 8·25 합의를 차근차근 이행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내일부터 금강산에서 열리는 이산가족 상봉을 합의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이산가족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정부는 내년도에도 남북관계 정상화는 물론 평화통일 기반 구축에 있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민생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이산가족의 아픔을 해소하기 위해 생사 확인 등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남북한 주민들의 동질성 회복에 기여하는 사회문화 교류는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경원선 남측 구간 복원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개성공단은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3통 문제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국제적 수준의 공단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보다 주도적인 자세로 남북관계를 이끌어 감으로써 남북 간 현안 문제들이 대화를 통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평화통일을 실질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제반 과제들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할 것입니다.

통일준비위원회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통일의 비전을 구체화하고 통일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과제들을 적극 발굴하여 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통일교육을 강화함으로써 통일 공감대를 더욱 높이고 통일 미래세대인 청소년 대상 통일교육을 한층 더 심화·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들에게는 취업과 자산 형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스스로 자립·자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고, 탈북민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다양한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넓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나경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통일부는 앞서 말씀드린 정책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2016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 예산안은 1조 9522억 원으로 이는 금년 대비 809억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일반예산은 3508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남북협력기금출연금 1200억 원을 제외하면 전년 대비 0.3% 증가한 230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운용규모는 총 1조 6014억 원이며, 이 중 남북협력사업을 뒷받침하는 사업비는 금년보다 222억 원 증액된 1조 26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상세

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16년에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본격 가동되어 남북관계가 진전되는 한편 우리 사회의 통일준비 역량을 한 단계 발전시킴으로써 평화통일 기반구축을 위한 튼튼한 초석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통일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경원 황부기 차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봉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박찬봉 존경하는 나경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16년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들은 2016년도 민주평통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예산안 개요를 바탕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주평통의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자료 3쪽 예산안 특징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민주평통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제17기 민주평통 활동 지원을 위한 전략적 재원 배분과 실천적 통일준비를 위한 성과 제고 및 재정지출 효율화 추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제17기 민주평통은 '8천만이 함께하는 행복한 평화통일'의 활동목표하에 '자문·건의 내실화, 통일준비 본격화, 통일미래인재 육성, 통합과 나눔의 평통인 상 구현'을 4대 활동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으므로 2016년도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이러한 정책목표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민주평통의 2016년도 세입예산안은 금년 대비 100만 원이 증액된 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액 258억 6500만 원보다 0.5%, 1억 4100만 원이 증가한 260억 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7쪽의 세출예산안을 세분하여 보고드리면, 전체 예산 중 인건비는 7.7% 증액된 50억 7600만 원이며, 기본경비는 1.0% 증액된 13억 1400만 원, 주요 사업비는 1.2% 감액된 196억 16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이하, 주요 사업별 예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일정책 자문·통일여론 조성사업은 자문회의 운영, 자문위원 역량 강화, 지역협의회 운영, 지역협의회 활동 추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 대비 2억 4900만 원이 감액된 190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문위원 역량 강화 예산은 청년·여성위원 역량 지원, 지역통일준비 역량 강화, 민주평통 기관지 제작 등을 위해 금년보다 8.4% 감액된 34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협의회 운영예산은 지역회의 및 협의회 사무원 249명에 대한 인건비 및 국내외 지역회의·협의회 운영비 지원 등을 위해 금년보다 2.1% 감액된 74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협의회 활동추진예산은 평화통일포럼과 통일시대 시민교실, 지역통일활동 지원, 청소년 통일공감사업, 해외 대북정책 강연회 등을 위해 금년 대비 5.2% 증액된 41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밖에 직원들의 행정 효율성 증진 및 능력 개발을 위한 예산 3000만 원, 정보화사업 예산 4억 원, 경비업무 등 청사 관리 외부위탁을 위한 시설관리예산 1억 6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민주평통의 2016년도 예산안은 자문·건의 및 여론수렴, 자문위원 역량 강화 등 민주평통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면서도 기존 사업 내역 조정 등 예산 효율성 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을 헤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희 민주평통은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조언, 정책대안들을 바탕으로 더욱 발전적으로 변화하여 헌법에서 부여한 책무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민주평통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2016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전액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이종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외교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외교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먼저 믹타 중견국 외교 워크숍 및 아웃리치 활동 예산 감액 필요성입니다.

우리나라는 2014년 9월부터 2015년 8월까지 믹타의 간사국을 맡아 제1차 고위급회의, 제5차 외교장관회의 등을 개최하였으나 금년 9월부터 호주가 간사국을 수임함에 따라 2016년도에는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회의가 없고 타국에서 개최되는 회의에 참석만 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액이 2015년도와 동일한 바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증액된 것과 같은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 중 이슈별 워크숍과 믹타 아웃리치 활동 및 협력사업의 경우 예산편성 단가의 증액 근거가 미흡한 바 단가를 전년과 동일하게 조정하는 등 예산액 중 일부의 감액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2쪽입니다.

아세안 문화원 관련 사업계획 구체화 필요성입니다.

외교부는 아세안 문화원을 설립하고자 2016년도 예산안에 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예산 집행과정에서 동 사업이 당초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수시배정사업으로 지정되는 등 사업 추진이 원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확대된 문화원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경우 총 사업비는 당초의 2배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세안 문화원 건립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는 이유는 2015년도 예산안 편성 당시 사업계획이 불충분하였고 현실성이 떨어졌던 점에 기인하고 있는바, 소관 부서는 동 문화원 건립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3쪽입니다.

청년 중남미 진출 지원 어플리케이션 예산 감액 필요성입니다.

청년 중남미 진출 어플리케이션사업은 중남미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담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운영하여 중남미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2016년도 예산안에 초기 제작비 및 유지보수비로 총 1억 8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제작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활용도 및 이용자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경우가 상당수였고, 다른 국가기관의 앱 개발 예산단가들을 고려할 때 동 어플리케이션 개발 관련 예산은 일부 감액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4쪽입니다.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파견의 제도적 보완 필요성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외교사업' 중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파견사업은 우리 청년들에게 재외공관의 공공외교 현장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외교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외교 활동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동시에 해외 진출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인데, 올해 파견된 공공외교 현장실습원이 공공외교와 관계없는 업무에 투입되었다는 민원을 제기했던 사례에서 보듯이 인력이 부족한 소규모 공관 등에서는 공공외교 현장실습원이 행정업무 및 기타 잡다한 공관 업무에 투입될 우려가 있는 바 제도 보완 등을 통해 사업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5쪽입니다.

국제개발협력사업 중 민관협력사업의 보조금사업 전환에 따른 철저한 대책 마련 필요성입니다.

기존의 한국국제협력단 출연사업이던 민관협력사업의 사업방식이 보조금사업으로 변경되었고 사업예산을 외교부로 이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기존 사업 참여자의 사업수행 혼선 등 예산 집행에 있어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관협력사업의 보조금사업 전환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관련 법령 및 지침 정비, 설명회 등을 통한 사업방식 변경에 따른 혼선 예방, 적절한 사업인력 확보 및 시스템 구비 등의 대비책을 사전적으로 철저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6쪽입니다.

여권사무대행기관 보조금 지급기준 개선 필요성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행하는 여권발급업무에는 통상 대행기관의 수입보다 여권 발급으로 인한 인건비 등 제반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는바, 대행기관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교부는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권 발급과정에서 순이익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반면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국고보조금으로 손실액을 보전하지 못하고 있는 등 주요 대행기관 간 손실보전액의 격차가 상당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보조금 지급기준의 개선을 통한 격차 해소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7쪽, 일본연구센터의 사업수요에 맞는 비목별 예산 반영 필요성과, 8쪽 재외공관 행정직원의 급여수준의 제고 노력 필요성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한국국제협력단 협력사업 중 확정적으로 취소된 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 필요성입니다.

국별 협력사업 중 인도네시아 대검찰청 성과관리개혁 및 시스템 구축사업과 베트남 e-Health 역량강화사업은 수원국의 수원태세 미흡으로 인해 협의의사록을 체결하지 못함으로써 사업이 취소되었고, 캄보디아 크랑폰리강 유역관개시스템 개선 및 농업 생산성 향상사업도 경제성 평가 결과가 미흡하여 확정적으로 사업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에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반영된 예산 34억 1200만 원 전액을 삭감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0쪽 및 11쪽, 재외동포재단 출연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나경원 이종후 수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용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통일부 및 민주평통자문회의 소관 예산안과 통일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용근 전문위원입니다.

2016년도 통일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본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일부 소관으로, 1쪽 평화통일상 제정의 적절성 검토입니다.

동 사업은 광복 7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평화통일상 제정 및 시상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한반도 평화통일 증진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2억 8000만 원 예산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상기준이나 수상자 선정방식 등 수상의 여러 사안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수상자 선정을 둘러싸고 이념적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있고 법적근거와 재정의 지속적인 확보방안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문제가 있으므로, 제정 취지에 맞게 통일 공감대 형성과 국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된 후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확실한 법적 근거하에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2쪽, 탈북청소년 화상영어 교육지원예산의 확대입니다.

동 사업은 탈북청소년들의 영어에 대한 자신감 증진 및 사용능력을 향상시키고 학습을 통해 글로벌 인재 양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1 대 1 실시간 화상영어교육을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최근 예산의 증가에 비해 신청자 수는 대폭 늘어나면서 탈락자 수가 많아져 이러한 추세라면 2016년에는 적어도 300명 이상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나 예산안은 12개월, 120명을 지원하는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영어가 남한 사회의 적응과 학교 교육에 필수적인 과목임에도 신청에서 탈락하는 학생이 많아지고 있으므로 재단은 탈북청소년 교육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3쪽, 남북회담본부 청사관리 위탁사업비 증액입니다.

남북회담본부 삼청동 청사 위탁사업은 시설·경비·위생 3개 분야에 1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3억 92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위탁사업비가 일반적 시중의 노임기준보다 낮게 책정되어 계약 및 인력채용 등에 있어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저임금으로 인한 고령자·비숙련공 근무비율이 매우 높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설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추가적인 예산 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4쪽, 지역통일교육센터 경상비 지출항목

의 재조정입니다.

2016년도에 편성된 지역통일교육센터 보조금예산 18억 5900만 원의 내역을 보면 경상비와 사업비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 경상비는 사무총장·지역센터 간사·탈북전문강사 인건비와 임차료 등 운영경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탈북전문강사는 지역통일교육센터에 소속되어 주로 청소년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초·중·고 및 대학생들의 다양한 수요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면이 있고, 지역별 탈북강사의 보수는 정액이나 출강 횟수는 지역별로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경상보조비로 상시 강사를 고용하는 것은 사업비 위주로 지원하여야 한다는 보조금예산편성지침에도 어긋나는바 탈북강사 인력풀제를 도입하여 사업비에서 강사 사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5쪽, 통일준비 민관 거버넌스 구축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사업과의 중복 문제입니다.

통일부는 통일준비 민관 거버넌스 구축사업을 통해 탈북민에 대한 국민적 인식 개선사업으로 탈북민 자체적인 자원봉사단체 육성, 탈북민 집중이용 의료기관 상담서비스 등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나 이러한 세부 위탁사업들은 탈북민 관련 사업으로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사업들과 일견 유사성이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통일부는 동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중복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고, 전반적인 사업관리 체계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6쪽, 광복절 경축사 관련 조사와 중복되는 이산가족 실태조사 예산의 삭감입니다.

이산가족 실태조사 사업은 올해 실시한 광복절 경축사 관련 남북 이산가족 명단교환을 통한 전면적인 생사확인 조사와 사업 내용이 일부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조사 경비 등을 일부 삭감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7쪽,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예산안으로 회의시설 부족에 따른 임차료 과다편성 문제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자문기구로서 기본적으로 회의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사무처 내에 회의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어 대부분의 회의는 호텔이나 연수시설 등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6년도 민주평통의 각종 회의에 필요한 임차료 예산은 2억여 원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매년 반복되는 비용으로 사무처에 일정한 규모의 상설 회의시설을 마련한다면 초기에는 다소 건립비용이 소요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임차료 지출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나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재외동포기본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의원 존경하는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여러분!

전남 여수갑 김성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대표발의한 재외동포기본법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 각지에 700만 재외동포가 거주하고 있음에도 이들을 위한 정부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법 및 시행부서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재외동포 정책을 종합·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법에 규정하고, 이를 조정·수행할 재외동포청을 설립함으로써 재외동포들의 거주국에서의 안정적인 정착·발전을 도모하고 모국에서의 경제·사회적 발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외동포'에 대해서 정의하고 '재외동포청'을 설립하며, 국무총리 소속의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재외동포들을 정책수립에 참여시키고 참정권을 확대·보장하며, 세계한(韓)문화주간을 정하여 민족적 유대감을 제고하는 것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외동포청의 설치와 관련해서는 이미 여야 간에 유사한 법안이 올라와 있고 또 재외동포사회에서 지난 10년 이상 지속적인 요청이 있어 온바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관련 업무와 예산의 통합이 시급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법안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시고, 19대 국회가 종료되기 전에 원안대로 저

희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한민국 정부와 카메룬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부터 제12항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협정 비준동의안까지 6건의 비준동의안에 대해 정부 측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세 외교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존경하는 나경원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대한민국 정부와 카메룬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등 6개의 비준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정부와 카메룬공화국 정부, 미얀마 연방공화국 정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동 협정들의 체결을 통해 카메룬·미얀마·케냐 내 우리 기업의 투자활동을 안전하게 보장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 협정들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체약당사국의 투자에 대한 내국민 대우와 최혜국 대우,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등 투자자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둘째 안보이익의 보호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 투자유치국의 정책자율성 확보 조치를 인정하는 한편, 셋째 투자유치국과 투자자 간 분쟁 발생 시 분쟁해결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ISD) 회부 사례가 증대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체약 상대국 영역 내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페이퍼 컴퍼니가 ISD제도를 남용할 수 없도록 이러한 기업에 대해서는 협정상 혜택의 부인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협정들의 체결을 통해 우리 기업이 카메룬, 미얀마, 케냐 등 신흥시장에서의 투자활동에 대한 법적 보호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이 협정의 체결을 통해 양국 간 자국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상대국 납세의무자의 금융계좌 관련 정보를 매년 자동으로 상호교환함으로써 국제 납세의무의 준수를 촉진시키고 역외탈세 방지 및 조세문제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협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양국은 2014년부터 관련 정보를 수집 및 교환하되 해당 정보는 이듬해 9월 말까지 교환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둘째, 교환된 계좌 관련 정보는 한미 이중과세 방지협약의 비밀유지 규정을 통해 보호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셋째,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이 협정을 준수하고 이 협정에 따라 양국 간 금융계좌 정보가 교환되는 경우 우리 금융기관이 미국 연방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1986년 양국 간 이중과세방지협약 발효 이후 변화된 양국 간 투자·교류 관계, 경제상황 등을 반영하여 소득별 과세원칙 등을 조정하는 협정을 새로이 체결함으로써 양국 간 경제협력을 더욱 증진하고자 합니다. 기존 협약은 본 협정의 발효 시점부터 효력이 중지되게 됩니다.

협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협정이 적용되는 조세를 우리나라는 소득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로 하고 인도는 소득세와 이에 대한 모든 부가세로 하고 있습니다.

둘째, 국제운수에서 선박 또는 항공기 운항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에 대해서는 소득을 벌어들이는 행위자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셋째, 배당, 이자와 사용료 및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는 해당 소득의 수취인이 거주하는 체약국에서 과세하되 그 소득이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제한세율에 따라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넷째, 동 협정 및 각 국의 조세 관련 국내법의 집행과 관련될 것으로 예상되는 조세정보를 교환하는 등 조세 관련 공조를 강화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협정 비준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이 협정의 비준을 통해 한국의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즉 AIIB 창립회원국 참여를 확정하고자 합니다.

협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AIIB는 인프라 투자를 통하여 아시아 경제·사회 발전 및 지역 내 연결성과 지역 간 협력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둘째, AIIB의 수권자본금은 1000억 달러이며 납입자본금 200억 달러와 요구불자본금 800억 달러로 구분됩니다.

셋째, AIIB는 일반적 다자개발은행과 동일하게 대출·지분투자·보증·기술원조 등을 통하여 업무를 수행합니다.

넷째, AIIB는 총회, 이사회, 총재, 1명 이상의 부총재 및 그밖에 임직원으로 구성됩니다.

금년 말로 예상되는 AIIB의 공식출범 이전에 동 협정문의 비준이 완료되어야 부총재 및 이사 수임 등 AIIB 내 고위직 수임을 통한 영향력 확대 추진이 가능함을 감안하여 동 협정에 대한 국회의 조속한 비준동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정부의 제안 취지를 감안하여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경민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민 위원님 의사일정 제19항입니다.

○신경민 의원 신경민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가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은 간첩조작사건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행 북한이탈주민보호법에서는 국가정보원 산하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와 통일부 산하 하나원을 정착지원시설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반도가 대치상황이지만 북한이탈주민이 입국 후 받는 조사에서도 적법절차의 원리가 적용돼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조사 원칙과 절차가 전혀 없고 조사와 시설 운영에 관한 모든 권한을 국정원장에게 전적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사권 남용, 영장 없는 구금 등 재량권 한계를 넘나드는 사례가 빈발하고 불법수사까지 가능한 형편입니다.

특히 시행령에서는 근거 없이 최장 180일까지 합신센터에서 조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최근 문제가 불거지자 90일로 바꾸겠다고 약속했습니다마는 이 시간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피조사자의 각종 권리, 예를 들어 변호인 조력권이나 인권존중에 관한 조항과 면회·전화·서신교환 등에 관한 명시규정이 없고 정신적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으로 간첩조작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와 하나원을 각각 임시보호시설과 정착지원시설로 분명하게 별도로 규정을 하고 이 시설들을 통일부 소관으로 함으로써 조사의 주체가 통일부가 되도록 했습니다.

우리의 특수상황을 고려해서 국가정보원은 간첩혐의가 있는 자 등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조사의 원칙과 절차를 법에 규정하고 피조사자의 각종 권리를 법에 명시함으로써 법적 통제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법안심사를 통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나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정부 측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부기 통일부차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차관 황부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나경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기초생활보

장법의 수급자의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동 기준을 준용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개정 사유를 감안하시어 이번 상정안에 대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경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13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종후 수석전문위원 나와서 의사일정 제3항 재외동포기본법안으로부터 제15항 일본 아베 정부의 11개 안보관련법 제·개정안 강행처리에 대한 규탄 결의안까지 외교부 소관 13건의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요약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김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외동포기본법안과 양창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재외동포청법안 및 재외동포재단법 폐지법률안은 재외동포청 설치를 통해 재외동포에 관한 정책·사무를 총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재외동포재단법 폐지를 예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체적으로 그 취지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 및 폐지법률안과 같이 재외동포청이 설치될 경우 재외동포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조정·수행함으로써 재외동포사회의 발전과 이익증진에 보다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정부기관인 재외동포청 설치로 인해 재외동포 거주국과의 법적 관할권 등 외교적인 마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과 행정자치부, 국방부 등 관련 부처가 업무 고유성 및 중복 가능성 등을 내세워 이견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동 안건들은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해당 개정안의 심사 경과를 보면서 심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쪽입니다.

임내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권법상의 여권발급 거부사유에 일정금액 이상의 고액체납자를 추가하여 고액체납자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고 세무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고액체납자의 해외도피를 봉쇄함으로써 성실납세를 유도하려는 것인바, 그 입법취지는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현재 고액체납자의 해외도피는 출국금지제도를 통해서도 충분히 제재할 수 있는 상황에서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와 직결되는 여권발급을 원천적으로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3쪽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 정부와 카메룬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등 총 3건의 투자보장협정 비준동의안은 양국 간에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경제분야 협력을 증진하고 상대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투자 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인바, 간접수용에 대한 보상규정,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 소위 페이퍼 컴퍼니에 대한 동 협정상의 혜택 부인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대국들에 대한 우리나라의 투자규모가 훨씬 크고, 상대국 국내 정치상황의 불안정으로 인해 상대국 정부가 협정상 의무를 위반하여 우리 투자자가 손실이나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바, 본 협정들의 비준동의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쪽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우리나라와 미국 간에 자국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상대국 납세의무자의 금융계좌 정보를 매년 자동교환함으로써 역외탈세 방지 및 조세문제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미국은 해외금융계좌 납세협력법을 제정하여 해외 금융기관이 미 국세청과 개별적으로 협약을 체결하여 미국인 금융계좌 정보를 보고하도록 하고, 의무 불이행 시 금융기관의 미국 원천소득 중 30%를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협정이 발효될 경우 우리 금융기관의 원천

징수 제재의 위험이 경감될 것으로 보이며, 국세청이 우리 납세의무자의 미국 내 금융정보를 매년 수집할 수 있게 되어 역외탈세 추적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바, 비준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쪽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1986년 양국 간 이중과세방지협약이 발효된 이후 변화된 투자·교류 관계, 경제상황 등을 반영하여 협정을 새로이 체결하려는 것입니다.

본 이중과세방지협정을 통해 한국과 인도 간 기업진출 및 상호투자 등 경제협력의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함은 물론 조세조약의 부당한 이용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세제도 및 행정에 관한 정보교환 등을 통해 양국 간 조세협력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비준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협정문 가운데 고정사업장 판정 기준이나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권 보유 여부 등 협정의 일부 내용은 기존에 우리가 다른 외국과 체결한 이중과세방지협정들에 비해서는 다소 불리한 측면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6쪽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협정 비준동의안은 우리나라가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의 창립회원국으로 참여함으로써 아시아지역의 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우리 기업들의 진출을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은 아시아지역의 인프라 투자자금 공급부족을 해소하고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 기존의 금융질서에 대응하여 중국 주도의 새로운 금융질서를 형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인바, 저금리 개발자금 지원을 통해 아시아지역 인프라 투자자금의 공급부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비준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이 본격적으로 운영된다면 아시아지역에 대형 인프라 투자·건설 시장이 열릴 것으로 예측되는바 건설, 교통, 통신 등의 분야에 우리 기업들의 사업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하여 이사회와 집행부 구성에 우리 전문인력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준비와 노력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 밖에 나경원 의원과 이원욱 의원이 각각 발의한 3건의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나경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용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6항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24항 쌀 대북지원 촉구 결의안까지 통일부 소관 9건의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용근 전문위원입니다.

신경민 의원 대표발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 3건의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본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신경민 의원 대표발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의 수를 6명 이상으로 증원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을 협의·결정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민간의 견해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그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보이나 통일부는 교추협의 논의사항이 대외적인 보안유지를 요하는 사안 등을 감안할 때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개정안의 취지와 정부 측 견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민간위원 증원 시 정부위원이 감원되는 문제점은 위원 총수를 함께 증원하는 방향으로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2쪽, 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남북 간 반출·반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현행 남북교류협력법 제13조를 대외무역법 제11조를 준용하여 남북 간 반출·반입의 경우에도 자유무역 원칙을 적용하는 것으로, 남북 간 교역 확대가 기대된다고 할 것이나 남북관계의 현실 및 남북관계의 특수성에 따른 제한의 필요성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3쪽, 김한길 의원 대표발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

회의와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특정 자격자나 기관의 권리를 보호하고 무자격자의 명칭사칭이나 유사기관 설립에서 오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법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동일명칭 이외에 유사명칭 사용까지 금지할 필요가 있는지는 금지로 인한 규제 확대의 문제와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기관을 설립함으로써 오는 폐해 등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4쪽, 신경민 의원 대표발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조사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사 및 보호시설 운영 주체를 국가정보원에서 통일부로 이관하고 조사과정을 법률에 의한 통제를 받게 하려는 것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침해를 방지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와 남북관계의 특수성, 정보수집 업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정부 측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혜영 의원 대표발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하나원 보호기간 중 보호대상자의 제3국 출생 자녀에 대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북한이탈주민의 편의성 증대로 대한민국에서의 신속한 적응·정착을 지원하려는 법 개정의 취지와 개정안의 실효성, 전체 법체계 내에서의 정합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5쪽, 정부 제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라 개정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동법 조항을 개정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생활보호를 계속 받게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음 6쪽은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 최규성 의원 대표발의 쌀 대북지원 촉구 결의안은 인도적 차원의 북한 주민 구호와 우리 농민의 실질소득 증대 및 사기 진작, 국가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정부가 쌀 40만t의 대북지원을 즉각 실시할 것 등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인도적 차원의 북한 주민 구호와 국내산 쌀의 과잉 재고 처리라는 긍정적 영향과 남북관계 상황, 북한 내 분배의 투명성 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9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나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대체토론은 지금까지 상정, 검토보고된 2016년도 예산안을 비롯하여 법안 및 비준동의안 등 총 2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한 분의 토론 시간은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으로 하고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보충 토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병국 위원 이번에 대통령께서 방미를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지만 많은 성과를 냈다라고 평가들이 있습니다. 그 반면에 아쉬운 점도 있는데, 일단은 긍정적인 평가다라고 하는 것은 굳건한 한미동맹의 재확인, 북핵 해결 의지의 재확인, 안보와 경제뿐만 아니라 우주과학, 사이버테러, 보건안보 등 전방위적인 글로벌 파트너십을 심화하는 관계로 격상시켰다 하는 성과를 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련의, 어제오늘 모든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문제, 또 실질적으로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다라고 보여지는 것이 과연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하고 준비를 한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정상외교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총괄적인 책임은 장관이 지고 있는 거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물론……

○정병국 위원 준비 단계에서는?

○외교부장관 윤병세 전체적으로 제가 합니다.

○정병국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의제는 어떤 것으로 할 것이며, 또 이 정상외교에서 우리가 얻어 낼 목표는 뭔지, 또 그러기 위해서 누가누가 참여를 같이 해야 될지 하는 부분들까지도 아주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준비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고요.

그런데 난데없이 한국형 전투기 개발과 관련해서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참여를 하는 문제가 의외다, 국방부장관이 정상외교에 참여하는 것 자

체가 의외다라고 나더니만 이 문제를 가지고 결과론적으로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에 어떻게 보면 재를 뿌렸다 하는 정도로 지금 평가들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국방부장관의 참여는 일단 이번의 일정 중에 미 국방부 방문이 있고 또 그 자체가 방미 행사의 상당히 중요한 일부분이기 때문에 참여한 것이고요. 지금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부분은, 그런 것은 일단은 이 문제와는 구분해서 보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병국 위원 그것은 장관님의 입장에서 구분하고 싶겠지요. 그런데 국민이 받아들이는 거나 언론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고 한다고 하면 국방부장관이 사전에 미국을 방문해서 조율을 하고 해서 사전 정지작업이 끝났거나 아예 이런 부분들이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로 들어가지 않았거나 했어야 된다는 거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이번에 의제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정병국 위원 이게 의제로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국방부장관이 같이 갔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국방부장관은 같이 가지는 않았습니다. 같이 가지는 않고……

○정병국 위원 같이 가지 않았는데 같은 시기에 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요. 같은 비행기를 안 탔다라고 해서 같이 안 갔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부처 간에 협의가 있었던 건지, 과연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준비를 했던 건지 하는 것에 대한 의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지난 국정감사 기간 중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굉장히 중요한 정상회담이다, 한 차례 연기가 됐고 또 중국의 전승절에 참여를 한 이후에 전개되는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이런 부분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을 거예요, 많은 위원들도 얘기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기본 아닙니까? 당연히 국방부장관이 가서, 이 문제는 그 이전서부터 이것을 허위 보고를 했느니, 안 했느니 하는 논란의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이 결과가 어떻게 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체크하지 않고 그 시기에 국방부장관이 거기를 가게 됐다, 동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것은 장관께서 사전에 캐치를 못 했거나 판단 미스였던 것 아니에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이번에 이 문제는 정상회담의 의제도 아니고요, 기본적……

○정병국 위원 아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의제가 아니라고 하면 왜 이 시기에 굳이 국방부장관이 방미를 했어야 됐느냐 하는 문제예요.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또 지금 보면 TPP 문제를 가지고 한국하고 미국하고의 입장이 다르다고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어요. 한국은 TPP 가입 필요성을 언급했고 그런데 미국은 한미 간의 FTA 이행에 더 관심을 가졌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한미는 TPP에서도 자연스러운 파트너로 한국의 TPP 참여 문제에 대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바마 대통령은 TPP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었다라는 평가를 한단 말이지요.

이런 부분들도 그 이전에도 TPP 가입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번 논란을 했습니다마는 결과론적으로 그때에 저희들이 우려했던 부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외교부장관 윤병세 TPP 관련된 일부 언론의 보도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TPP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오바마 대통령께서 얘기를 한 것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박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미 높은 수준을 달성한 우리가, 한미 양국을 말하는 겁니다만'……

○정병국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미 오바마 대통령이 TPP에 대해서 언급한 게 뭡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바로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오바마 대통령이 얘기한 것은 박 대통령이 얘기한 것을 받아 가지고 '박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미 높은 수준을 달성한 우리가, 즉 한미 양국이 다른 나라들 역시 높은 수준을 달성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사전에 합의가 된 한미 관계 현황 공동성명서에서는……

○정병국 위원 결과론적으로……

자, 언론에 난 것하고 별 차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국방부장관이 이번에 같은 기간에 방미

를 한다고 했을 때 외교부장관 입장에서는 의견 개진을 했나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통상 방미 때 일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국방부 방문과 그런 행사가 중요한 일부였기 때문에 국방부장관이 가는 것이 전혀 이상할 것은 없습니다.

○정병국 위원 예?

○외교부장관 윤병세 국방부장관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이상할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정병국 위원 아니, 이상할 것은 없는데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재 뿌린 격같이 됐어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고 사전에 판단을 했어야 된다는 거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이것은 방미……

○정병국 위원 저는 이게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아니, 대통령께서 기껏 가서 고생하셔 가지고 정상외교를 하는데 참모들이, 장관들이 이런 식으로 일을 해서 되겠어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보통 자기 카운터파트(counterpart)나……

○정병국 위원 그 답변은 좀 이따 들을게요, 시간이 없어 가지고.

예산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간 해외여행객이 1600만 명이고 재외국민은 280만 명이에요. 발생 건수가 매년 20%씩 증가를 하는데, 국감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에 11명 증원하는 데 그쳤고 2016년에는 아예 예산이, 인원이 증원되지 못했어요.

사건·사고 담당 영사 보조인력이 필요한 곳이 무려 62개 곳이고 74명이 필요한데 필요한 예산이 4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추측이 돼요. 그런데 전혀 예산을 확보 못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 증액해서라도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요.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국제사회에 약속한, 그러니까 정상외교를 한다든가 다자간 회의에 참석을 하셨다든가 여러 가지 해서 MOU를 체결하거나 했는데, 후속 조치가 이행된 게 31%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2014년도 7월 3일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중 청년지도자포럼을 정례화하겠다라고 했는데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어요. 이 부분도 한 7억 5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챙길 수 있도록, 이게 관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한·아세안 정상회담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차세대지도자 교류사업도 예산이 1억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250명 초청하는데 어렵다, 3억 정도 추가할 수 있도록…… 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해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코리아 파운데이션에서 차세대정책전문가 육성사업에서도 몇 차례 지적을 했는데도 전혀 이게 반영이 안 됐다, 그래서 이 예산 추가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독일 파독광부기념회관이 있는데, 이게 광부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회관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예산 마련을 못 해서, 이게 벌써 30년 지났는데 비가 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리모델링 예산을 요구하는데 전혀 안 되고 있다, 약 3억……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필요하다고 하니까 편성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나머지는 서면으로 하고, 아까 말씀했던 것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보통 저도 그렇습니다마는 외교부장관이나 국방부장관의 카운터파트가 상대국을 방문할 때 참여하는 경우는, 대체적으로는 그 해당되는 각료들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국방의 경우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국방부 행사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서 아마 국방부장관이 참여된 것으로 제가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KF-X 문제는 그와 별도로 국방부장관이 이미 설명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병국 위원 그런데 그것은 정말 무책임한 거예요, 장관 입장에서. 정상외교 회담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누가 참여를 하는지, 어떤 것이 의제가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것은 우리 부처 관계가 아니니까 내 책임 아니다, 이것 말이 됩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국방부장관이……

○정병국 위원 왜 지금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이 사표를 내느니, 또 책임을 져야 되느니 이런 얘기가 나와요? 실질적으로 총괄책임자는 외교부장관이 총괄책임자 아니에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 해당되는 시점까지는 전혀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병국 위원 관여를 하는 게 아니고, 관여를 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 나경원 자, 마무리해 주시지요. 오늘 국회……

○정병국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참여를 시킬 건지 말 건지, 시기를 바꿀 건지 말 건지 하는 부분까지 논의를 했어야 된다는 거지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답변하신다면 장관이 직무유기하는 거예요. 책임져야 돼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외교부장관 윤병세 해당되는 각료의 참여 문제에 대해서는 바로 그러한 중요한 일정들을 감안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병국 위원 결과론적으로 문제가 있잖아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일단 그 해당되는 문제는 이것과 구분돼서 보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정병국 위원 구분돼서 봅니까, 국민들이?

○외교부장관 윤병세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나경원 정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한길 위원 윤 장관께 묻습니다.

황교안 총리가 본회의 답변 도중에 일본 자위대와 관련해서 '필요시에는 일과 협의해서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을 허용하겠다' 이렇게 답변한 것이 신중치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이미 총리실에서……

○김한길 위원 아니, 답변하세요. 신중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제없는 답변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총리께서 그동안에 이 문제에 대해서……

○김한길 위원 장관님!

○외교부장관 윤병세 정부가 밝힌 입장을, 아마 그 취지를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한길 위원 장관님, 신중하지 못한 답변이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별문제 없는 답변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이미 총리실에서도 추가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우리의 요청 또는 동의가 없는 한……

○김한길 위원 장관은 제가 묻는 것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제대로 대답해 봐요,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외교부장관 윤병세 제가 총리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총리실의 입장과 또 저희가 해석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의……

○김한길 위원 황 총리는요, 이 발언이 문제가 된 다음 날에도 다시 그 문제와 관련해서 답변하면서 '일본이든 한국이든 거류민의 신변이 위태롭다면 같이 공조해야 할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답변했어요.

이 답변의 뜻은 우리나라에 거류하는 일본인들의 신변에 위험이 있다면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취지였던 것 같은데, 이것 역시 매우 신중치 못한 답변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은 생각이 다릅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의 입장이 나와 있고 총리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김한길 위원 장관의 입장이 뭐냐고 거듭거듭 묻는데 다른 얘기만 해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제 입장은 저는 수없이 밝혔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요청이나 동의가 없는 한 용인될 수가 없다는 것이 정부가 취하고 있는 확고하고 일관된 입장입니다.

○김한길 위원 지금 황 총리의 논리대로 한다면 우리 땅에 와 있는 중국인들의 신변이 위협받는다고 판단하면 중국 군대가 올 수도 있고, 러시아 사람들의 신변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러시아 군대가 올 수도 있다는 얘기와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은데요? 굉장히 심각한 발언 아닙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에 대해서 충분히 총리께서, 또 총리실에서 그 취지를 설명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한길 위원 윤 장관께 뭐 묻는다는 게 참 허무한 일 같아요. 한 번도 제 질문에 정면으로 답변해 본 적이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에 참석하고 한중 정상회담 가졌는데 성공적이었다고 보십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전체적으로 다 의미 있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한길 위원 그 회담이 성공적이었다고 한다면 중국 경사론을 벗어나기 위해서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안절부절못하는 일은 없었어야 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병국 위원님께서 국방장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 큰 성공을 거둔 것처럼 아까 보고하셨어요. 외교장관은 아마 그렇게 판단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기대했던 국익이라고 할까요? 전문직 비자쿼터 확보하는 문제도 성공을 거두지 못했고, 또 조금 전에 지적받으신 것처럼 차세대 전투기의 핵심기술 이전 문제도 면전에서 거부당하는 수모를 당했어요.

더군다나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중국이 잘못할 때 한국이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이것은 사실 국가 정상 간에 말하거나 듣기에 거북한 얘기일 텐데 이런 말까지 나오고 말았어요.

그래도 여전히 이번 대통령의 방미,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합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아마 이번 방미 회담 결과를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과거랑 차별화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아시게 됩니다. 이번에 북핵 관련된 공동성명도 정상 차원에서는 최초이고요.

○김한길 위원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글로벌한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성과 있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한길 위원 북한 관련 공동성명, 새로운 해법 제시한 것이 없어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지요. 북을 대화로 이끄는 과감한 접근 의지를 보이지도 않았어요.

더군다나 6자회담에 대해서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문제 아니에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6자회담은 그 안에는 녹아들어가 있습니다. 신뢰하고 의미 있는 그런 비핵화 대화에 들어오라는 얘기는 6자회담까지 포함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김한길 위원 미국에 가서 한일 정상회담을 예고했어요, 우리 대통령께서.

한일관계라는 것이 우리의 국익 차원에서 검토될 일이지 이것이 미국에게 주는 선물 비슷하게 얘기돼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선물하고는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김한길 위원 지금 일본의 태도 변화가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이번에……

○김한길 위원 일본의 어떤 태도 변화 때문에 우리 대통령이 먼저 한일 정상회담 얘기를 미국 가서 꺼낸 겁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것은 질문도 나왔고요, 우리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이번 한중일 3자 정상회담은 다자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우리가 3국 정상회담을 정상적인 복원을 시킴과 동시에 양자관계에서도 의미 있는, 그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한다 하는 것이 기본 입장이고요.

○김한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 장관님 답변에서 별다른 것을 기대한 것은 아니지만 저는 우리 외교가 좀 쿨했으면 좋겠어요. 의연했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겉의 포장, 국내 홍보 이런 데만 치중하지 마시고 실제로 국익 차원에서 얻는 외교가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중국에 대해서도 그렇고 미국에 대해서도 그렇고 의연하고 당당하게 도를 넘지 않고.

'우리나라로 보면 당신네 나라가 제일 중요하다' 이런 식의 접근 말고 '그저 이웃끼리 잘 지내자' 이런 태도 정도로 우리가 주변 국가를 상대한다면 특별히 또 다른 나라에 가서 한쪽 나라에 치우친 것 같은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안절부절못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허풍 떨지 말고, 그렇다고 주눅 들지도 말고 쿨한 외교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답변 안 들어도 돼요, 그냥 참고하시고요.

예산 관련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어지간한 것들은 서면질의를 하겠습니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관련 예산, 올해도 유라시아 친선특급이라고 해서 그저 남의 나라 기차를 떼로 몰려가서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예산 그것이 필요했는가, 저는 진작부터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라는 것이 우리가 북한을 경유해서 유럽과 연결될 때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 없이 그저 조사나 하고 용역이나 주는 이런 식의 예산은 예산 낭비다 하는 생

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실크로드 익스프레스라는 것이 이번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사업의 핵심이라고 하는데요, 부산에서 출발한 열차가 북한과 러시아, 중국, 중앙아시아를 관통해서 유럽까지 연결되면 그것이 우리가 희망하는 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중 페리를 활용해서 유럽과 연결점을 찾는 그러한 사업의 용역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거든요.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장관님은 늘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외교는 너무나 잘되고 있고 잘못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인정하신 적이 없어서 대통령께는 높은 점수를 따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익 차원에서 어떤 외교가 우리에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셔서, 또 잘못된 것 좀 잘못됐다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반복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가 얻는 것일 텐데요.

쿨한 외교, 당당한 외교가 필요하다 하는 제 말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경원 김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 장관님, 대통령 모시고 다녀오시느라고 고생 많았는데 방금 김한길 위원님 질의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최근 북한이 핵에 대한 언급도 자제하는 등 뭔가 대화의 제스처를 보이고 있어서 대통령이 이번 방미에서 미국과 함께 북한을 압박하기보다는 대화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상회담이 되기를 바랐는데 오히려 북을 콕 찔러 가지고 더 압박하는 이런 식의 성명서가 나와서 저는 앞으로 남북관계나 6자회담이 참 염려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김한길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제가 볼 때는 이번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 일부에서 일고 있는 중국 경사론을 불끄기 위해서 펜타곤도 방문하는 등 눈치 보는 외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왜 미국으로부터 친구냐 친구가 아니냐, 중국 편이냐 미국 편이냐 이런 식의 양자택일적인 강요를 받아야 됩니까?

미국은 보면 전부터 친구냐 적이냐 이런 양자택일식의 요구를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는 당당히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중국하고도 가까울 수 있고 미국하고도 가까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왜 우리가 양쪽에서 눈치 보는 외교를 합니까, 장관님?

○외교부장관 윤병세 말씀을 드릴까요?

○김성곤 위원 예, 간단히 좀.

○외교부장관 윤병세 사실 이번에 공동기자회견을 보신 분들은 중국 경사론이라는 것이 더 이상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아마 다 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바마 대통령이 본인의 입으로 '한국의 중국 관계의 발전 강화 노력을 지지한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고요. 오히려 미국도 중국과 가까운 관계를 맺으려고 그러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이 그렇게 중국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은 어떠한 모순도 없다 하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밝혔거든요. 그리고……

○김성곤 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행보가 그렇게 비쳐진다, 저는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얼마 전에 북한 리수용 외무상이 유엔 총회에서 평화협상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2005년 4차 6자회담에서도 평화체제로의 이전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데 저는 지금은 이런 평화협상을 우리가 진지하게 검토해 볼 단계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관께서는?

○외교부장관 윤병세 평화체제의 문제는 이미 9·19 공동성명에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와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렇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다만 9·19 공동성명을 포함해서 그 이후에 모든 정부에서 지켜 왔던, 견지해 왔던 입장은 이런 것은 비핵화 문제가 어느 덧 진전이 되고 난 후에 그것의 하나의 이어지는 과정으로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 그것도 북한이 얘기하고 있는 북미 또는 미북 평화협정이라는 차원이 아니고 유관 당사국 간에 별도 포럼에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김성곤 위원 그러니까 북핵 문제가 해결되어야지 평화체제로 갈 수 있다 지금 그런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진전이 좀 이루어지고 난 후에 그런 문제도 배제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고요.

○김성곤 위원 글쎄, 이게 자꾸 똑같은 입장의 반복인데 장관께서는 지난번 업무보고나 오늘 업무보고에도 '북핵 문제에 대해서 5자간 공조가 공고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물론 북핵 자체는 미·러·중·일 다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미국·일본하고 또 중국·러시아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못 느끼시나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전체적으로 비핵화에 대한 반대 입장은 중국·러시아도 큰 차이가 없다고 보고요.

○김성곤 위원 물론 그렇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특히 시진핑 주석이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공동기자회견 때 아주 분명히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분명히 강하다고 보고요.

다만 전체적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더 의식하는 측면은 중국과 러시아가 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중국은 미국이 먼저 북미 수교 등을 통해서 북한의 안전 문제를 보장하라는 쪽이고, 미국은 북핵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된다는 거고 이런 입장의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장관께서는 5자가 마치 같은 입장을 취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이것은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있는 팩트 그대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문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재외동포사회의 파트너 사업, 이것은 재외공관들이 해당 지역의 한인회 등을 도와주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인데, 그중에 민주평통이나 통일부 사업하고 중복되는 예산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중복할 필요가 있는가 해서 전체 예산의 일부를 삭감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제안드리고요. 이건 소위에서 논의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마 이것 외교부에서 유일하게 NGO 단체들 지원하는 1억밖에 안 되는 예산입니다. 유엔 세계 평화의 날 행사 지원이라고 한국의 조영식 박사가 제안해서 1981년부터 유엔에서 세계 평화의 날을 기념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반기문 사무총장이 되신 이후에 '우리나라도 여기에 적극 관심을 가져 달라' 해서 2012년부터 외교부에서 1억씩 지원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기재부에서 잘라 버렸어요. 외교부가 디펜드를 해 주셨어야 되는데, 이것 다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 보조인력입니다. 오히려 작년보다 삭감이 됐는데 재외국민보호법이 여야 간에 동일하게 수년째 계류되어 있지 않습니까, 장관님?

저는 이것 19대 국회에 통과시키지 않으면 여야 그리고 외교부까지 재외국민들을 기망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법안심사소위하고 상임위에서 이것 반드시 통과를 시켜 줘야 되는데 조건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사인력이나 영사예산이 현 상태로서는 재외국민보호법의 취지를 살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앞으로 매년 영사인력과 예산을 한 10%씩 늘린다. 그래서 5년 후부터 재외국민보호법을 실시한다' 이런 단서를 달아서 재외국민보호법도 통과시키고 영사인력이나 영사 관련 예산도 단계적으로 증액을 시키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께서는?

○외교부장관 윤병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사인력 증원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미 벌써 작년에 국회에서 도와주셔 가지고 보조인력 11명을 증원한 결과 많은 효율이 높아진 것이 통계적으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이런 사업을 11개 공관에서 62개 공관으로 한 74명 정도로 확대해 주기를 저희들로서는 희망하고 있고요. 그리고 김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리고 재외동포 교육사업 예산 이것 서면질의하겠습니다마는 증액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KOICA를 통해서 나갔던 민관협력사업 이것이 320억인데 '출연금을 보조금 형태로 외교부로 이관시켜라' 이게 기재부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당장 이관하기도 쉽지 않고 결국은 KOICA를 통해서 나갈 그런 예산인데 어쨌든 이것은 당분간은 현행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그래서 소위에서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통일부 차관님, 남북협력기금 거의 쓰지를 못했는데 계속 이렇게 불용하는 게 맞는

지, 이것 하여튼 반성 내지는 예산집행 제고를 위한 방안을 소위에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이것 내년에도 어렵습니다. 저는 이것 삭감 요청을 하겠고요.

또 평화통일기반구축법 제정 관련 예산, 이것 법도 아직 통과 안 되어 있는데, 물론 법 통과를 전제로 하고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시기상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이따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겁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손광주 이사장에 대한 경상비 삭감 문제.

그리고 민주평통 해외지역 자문위원 항공료 지금 15%밖에 지원 안 하는데 이렇게 할 바에야 차라리 자문위원 숫자를 좀 줄이고 항공료를 적어도 한 50% 정도는 지원해야지 이것 15%가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것도 소위에서 대안을 통일부에서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경원 김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혜영 위원 먼저 외교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7일 국정감사 때 우리 정부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해서 한 번도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하지 않는 미온적인 태도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가 지난 대정부질문 때 황교안 총리의 발언으로 나타났다고 보여집니다. 이 발언이 있은 직후에 국민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총리냐?' 하는 질타를 SNS상으로 많이 쏟아 냈습니다.

이번에 온라인상에서 '가도입명'라는 말이 인기검색어로 등장했다는 얘기를 장관께서는 아십니까, 가도입명?

○외교부장관 윤병세 제가 어제 귀국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원혜영 위원 한번 훑어 보세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원혜영 위원 가도입명 무슨 내용인지 아시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대충……

○원혜영 위원 내용 자체는 아시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원혜영 위원 명나라 길 터 줬다 그런 얘기지요.

정부는 총리가 말한 대로 일본과 협의해서 필요성이 인정되면 자위대의 입국을 허용할 방침입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의 입장은 일관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의 동의나 요청이 없게 되면 그건 있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고요.

또 하나 분명한 것은 일본 자위대법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자위대법에도 해당국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나와 있고요. 또 국제법상으로도 자의적으로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다른 나라 영역에 진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영토주권의 원칙이라는……

○원혜영 위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좀 문제가 많은 발언을 하니까 산케이는 '한국 정부가 자위대의 한반도 상륙과 관련해서 일한 2국 간 또는 미국을 포함 3국 간의 협의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요미우리는 '조건을 걸기는 했지만 한국 정부가 자위대를 받아들이겠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렇게 일본에서는 일본군의 한국 진입 가능성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어요.

'부득이한 경우는……' 하면서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위한 멍석을 알아서 깔아 주는 총리의 발언 하나가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아주 민감한 사안에 매우 신중하게 대응을 하고 있던 정부의 방침에 재를 뿌린 겁니다. 이걸 어떻게 대응할 생각입니까?

외교부장관으로서 경솔하게 국익을 훼손한 황 총리에게 국민에게 사과할 것을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또 대통령한테 해임을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총리의 발언 취지가 제가 말씀드린 정부의 입장을 바탕으로 깔고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오해가 없도록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의 입장은 일관되다, 그래서 저희 주권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희의 동의나 요청이 있어야 되고 또 국제법에 이렇게 되어 있고 일본의 국내

법도 그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원혜영 위원 그런 점에서 정부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반대 의사, 그리고 절대로 일본군은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저희가 수없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외교당국, 국방당국 여러 레벨에서 얘기를 했고요. 또 미국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랑 협의를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고, 그러한 저희의 우려와 관심이 상당한 정도로 미일 방위지침, 신지침에 반영이 되어 있고 또 일본 국내법에도 많이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원혜영 위원 이러한 잘못된 문제 대응들이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고 또 잘못 이용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석간 문화일보를 보고 질문을 드리는 건데 아사히신문에 소개된 내용이에요. 19일자 사설에서 '민주화 이후 약 30년이 지난 지금의 한국은 다양한 가치관이 존재하는 선진국이다. 이제 와서 왜 역사교과서만을 국정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이 아사히신문은 '현행 교과서에 군사독재에 비판적인 기술이 적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국정화의 노림수는 대통령의 부친의 명예회복이라고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또 이어서 '박 대통령은 일본에 대해 반복해서 올바른 역사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면서 '박대통령의 주장만이 올바른 것이라는 자세는 일본 측에 실망감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렇게 일본의 언론까지 나서서 한국의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반대와 우려를 표명하는 게 아주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일본도 내년 봄에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한답니다. 거기에 일본 아베 정권이 '근현대사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을 명시하도록 하겠다' 하는 지침을 발표한 바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 정부와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서로 맞물려서 역사를 왜곡하고 자기네들 입맛에 맞게 바꾸려고 하는 시도가 있을 거라고 보고 이런 일본 신문조차 우려의 표시를 하는 겁니다.

일본에서 근현대사에 정부 입장을 반영하도록 한다면 결국 제도적으로 영토 교육을 강화하는 걸 거고, 위안부 문제도 아베 정권식으로 해석하려고 하겠지요. 그런데다가 우리 뉴라이트 교과서에 소개된 것 보면 '쌀은 강제로 뺏긴 게 아니라 수출한 거다' '위안부들은 자발적으로 쫓아다녔다' 이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우려 때문에 일본의 시민단체나 언론이 이런 걸 하는데 그런 점에서도 우리 정부가 국정화 문제에 대해서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의 의견을 말씀하시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에 교육부와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다만 일본 측의 역사에 대한 접근 방식과 저희가 접근하는 방식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

○원혜영 위원 아니, 방금 말이지요, 우리 검인정 교과서에 반영된 뉴라이트 역사학자들의 내용이 '쌀은 수출한 거다, 정당하게' 그리고 '종군위안부들이 자발적으로 쫓아다녔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래서 하여튼 교육……

○원혜영 위원 그게 일본에 영향을 안 미친다는 얘기입니까? 일본도 그럴 것 아니에요, 우리 국정교과서 단일화되면 '한국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왜 일본에서 쓸데없는 소리 하냐?' 그렇게 검정할 것 아닙니까, 걱정 안 됩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교육부에서 올바른 역사인식을 배양하기 위한 취지에서 한 것으로, 설명해 온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고요.

○원혜영 위원 어쨌든 장관께서 일본의 검인정 교과서에 정부 입장을 반영하는 것과 한국의 국정화 추진하고의 연관 관계가 어떤 점이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국정화 교과서 논란에 반영을 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답하기 어려우시겠지요? 답변하라고 안 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께 묻겠습니다.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사업이 2014년도에 302억 원, 2015년도 324억 편성됐는데 올해 또 324억 편성했어요. 다 아시는 것처럼 연구개발비만 집행됐고, 재작년 예산 그랬지요? 올해 2015년도 예산도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결국 기반조성사업비도 불용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토지매입비, 조사설계비, 심지어는 지뢰제거비까지. 북한

은 지금 아주 콧방귀도 끼지 않고 있는데 이런 걸 3년째 국가예산에 세우고 우리 국회가 승인한다는 게 참 아주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기본적으로는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쪽으로 역량을 강화해야 되고 예산도 그에 맞춰서 기본적인 것만 반영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어서 질문과 답변을 같이 요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용역 겨우 된 건데 이번에 또 기반조성사업비를 2년 연속 집행되지 않은 걸 반영하겠다는 건 무리인 것 같고, 그래서 기본조사설계비만 반영하는 게 좋겠다, 나머지는 삭감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고.

대안으로 북한과 협의해서 성사시킬 가능성이 큰 게 바로 문화협력, 역사문화협력이고 만월대 발굴이 그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한 DMZ 내 궁예도성 남북 학술조사 예산을 한 10억 정도 반영해서 북한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보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궁예도성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DMZ 내에 있기 때문에 발굴을 시작하면 그것이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으로 연결될 수 있는 징검다리로서의 기능이 있을 거다라는 걸 쉽게 판단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답변을 해 주시지요.

○통일부차관 황부기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DMZ 내에 있는 궁예도성 공동 발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남북협력기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하여튼 정부로서도 남북관계가 경색이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진도가 나가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이 부분이 내년도에 남북 간에 합의가 되면 바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뢰 제거라든지 토지 보상이라든지 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남북협력기금은 내년도에 추진하는 사업들을 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체로 기금에 편성을 해 두고, 하여튼 기금에 편성된 대부분의 사업들이 그런 식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돼 있는데, 편성해 두고 일단 남북 간에 합의가 되면 바로 추진하는 식으로 그렇게 종래에 집행을 해 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이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사업은 당국 차원에서 합의가 되면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경원 원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찬 위원 외교부장관님, 한일 간에 또 한미일 간에 군사정보 교류를 지금 하고 있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이해찬 위원 지금 고위 채널로 어떤 채널이 가동되고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대개 실무적인 채널이 국장급 또 아니면 차관보급이 있습니다마는 1년 한 번 정도는 샹그릴라 대화 계기로 해 가지고 국방부장관들이 한 번 정도 만나는 게 대개 관례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찬 위원 국방부장관들이 만나면 그 결과를 외교부장관한테 정보를 공유해 줍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외교적으로 함의가 있거나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NSC 회의라든가 아니면 또 양자적인 채널을 통해서 공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해찬 위원 황교안 총리가 답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일본이 우리와 협의를 해서 우리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면 입국을 허용할 것입니다', 앞의 문장이 문제가 아니고 '입국을 허용할 것입니다' 이 부분을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거든요.

일본 신문들도 처음으로 한국 정부가 입국을 허용할 수 있다 이런 태도로, 이런 뉘앙스로 답변했다고 해서 모든 일본 신문들이 '최초로 한국 정부의 고위관리가 입국을 허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많은 보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총리를 해 봤습니다만 총리 인준을, 청문회 하려면 여러 부처의 주요 사항들에 관해서 사전에 업무보고를 받잖아요, 청문회 준

비하는 과정에서. 아마 일본 자위대 문제라든가 전시작전권 문제라든가 이것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항목이거든요. 그런데 총리가 이것에 대한 인식 수준이 아주 낮아서 이번에 본회의에서 문제가 된 거예요 .

우선 전시작전권을 한미 간에 공동으로 행사한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두 번, 세 번씩이나. 모르면 나중에 확인하고 답변하겠다고 해야 되는데 한미 간에 공동으로 한다고 답변하니까 우스운 꼴이 돼 버린 거란 말이지요.

전시작전권 이양 문제 가지고 한미 간에 2012년까지 이양하기로 했다가, 2015년까지 이양하기로 했다가 박근혜정부 들어와 가지고 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이양하는 걸로 바뀌어 온 과정이,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직 총리가 이렇게 답변하니까 안보의식의 수준이 아주 저열하다라는 걸 입증한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또 무슨 얘기를 하셨느냐 하면 '파병 문제 같은 경우는 조약이나 협정으로 될 문제는 아니고 양국 간의 협의를 통해 포괄적인 논의를 했고 구체적인 요청과 약속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약속이 있었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한일이나 한미일 이런 협의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우려하는 그런 것을 충분히 전달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저희 우려를 반영하는 그런 반응이나 또는 국내외적인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일 신방위지침에는 제3국의 주권, 제3국은 사실 한국을 의미하는 겁니다마는 한국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게 명시되어 있고요. 또 일본의 주요한 국내법 이번에 개정하거나 제정하는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제3국의 주권을 존중하는 이런 것이 있고 또……

○이해찬 위원 자, 봐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또 무슨 답변 하셨느냐 하면 '다른 공식적인 협의 과정에서 필요한 이야기들을 충분히 나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와 일본과의 직접적인 협의도 있었고 또 미국과 함께한 3자 협의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한미일 3자 간의 논의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있었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시가 발생하면, 일본군이 파병된다고 하는 것은 거의 전시 수준에 가까울 때나 파병되는 것이지 그냥 단순하게 파병되는 건 아니에요. 전시 수준이 되면 전시작전권은 미 연합사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군은 작전권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국과 일본은 군사동맹 관계란 말이에요. 미국이 전쟁을 일으키면 일본은 자동으로 파병하게 되어 있어요.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한반도에 관한 전시작전권은 미국이 갖고 있어요. 우리가 일본 군대 오라 마라를 할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지금 전시작전권에 의해서.

그런데 그것이 15년도까지라도 회수가 됐으면, 15년이면 올해 아닙니까? 올해 12월 달까지, 원래 이명박 정부는 올해 12월 달에 회수하는 걸로 했던 건데, 이양하는 걸로 했던 건데 아직, 박근혜정부가 들어와 가지고 무기 연기시킨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전시가 발생하지 모르는데 그때 우리는 일본 군부대에 관한 통제권도 없고 미군부대에 관한 통제권이 없단 말이에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총리님, 한 가지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해찬 위원 다른 얘기 할 것 없어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아닙니다, 전작권 관련해서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이해찬 위원 뭐가 오해가 있어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전작권 문제는 모든 것을 우리 연합사령관이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 통수 과정을 양국 통수 과정을 거쳐서 양국 최고 지도자들이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사령관이 모든 걸 행사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그것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해찬 위원 뭐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지금 최종 결정권은 미 통수권자가 가지고 있는 건데.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원래……

○이해찬 위원 우리는 의견을 개진할 뿐이지…… 그러면 전작권을 왜 우리한테 환수를 해요, 우리가 권한이 있으면?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것은 효율성을 위해서 연합사령관이 행사하는 그러한 범위를 정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마는……

○이해찬 위원 그다음에요, 이 문제 가지고 지

난번 외교부장관이 미국 가셨을 때 강창일 의원이 이렇게 막 물었습니다. '지난번 윤병세 장관이 미국 가서 외교부장관이 이 문제를 논의하려고 하니까, 미국의 요청이 있었을 때, 다음에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 거류민의 신변에 위협이 있을 때, 이 문제를 논의하려고 했더니 한국 정부가 피했어요. 외교부장관이 그때 피했어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일국의 국무총리가 명료한 인식을 가지지 못하고 나중에 구구하게 변명을 많이 했어요, 그 다음 날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신문은 얼씨구나 좋다 하고…… 말하자면 실언입니다. 실언을 가지고 계속해서 보도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나경원 위원장, 심재권 간사와 사회교대)

또 하나는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가셔 가지고 여러 가지 외교를 잘하신 걸로 여기도 아까 보고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말하자면 미국 정부로부터 상당히 무례한 대접을 받았단 말이에요.

정상회담 하고 기자회견 할 적에 오바마 대통령이 난데없이 남중국해에 관해서 한국의 입장을 밝히라고, 어떻게 그런 무례한 외교적인 결례를 합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남중국해 문제의 '남'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일부 언론에서 잘못 해석을 해서 그런 거지 일반적인 국제질서, 국제규범을 준수하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것도 큰 컨텍스트(context)상에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해찬 위원 그런 컨텍스트상 얘기를 하면서, 우리 언론은 오늘도 전부 남중국해로 쓰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아니라고 외교부에서 입장을 발표했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지금도 저희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설명을 했고요.

○이해찬 위원 어디 정정자료 가져와 보세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저희 전화로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죽 했습니다.

○이해찬 위원 정정을 하는데 전화로 한다고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어제 보도가 죽 나오는 과정에서 저희가 그런 것이 정확하지가 않다는 것을 죽 설명을 해 줬습니다.

○이해찬 위원 그러면 어떻게 오늘 조간하고 석간에도 다 그대로 보도가 됐어요, 정정 요청을 했으면?

○외교부장관 윤병세 아니, 요청을 한 게 아니라 그것 정확하지 않다는 걸 제가 설명을 해 줬습니다, 이 PG를 통해서.

○이해찬 위원 그래 가지고 국민들이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이렇게 언급을, 양자 정상회담에서 할 때 다른 나라에 관련된 걸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프로토콜(protocol)상 맞아요, 그게?

○외교부장관 윤병세 기자회견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얘기한 것을 보게 되면 역대 최상의, 최강의 그런 한미 관계다, 이런 것을 스타트로 죽 했습니다.

○이해찬 위원 그런 수사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한국의 입장이 뭐냐, 영유권을 주장하는 지역에 대한 입장이 뭐냐, 그것을 분명히 해라, 미국 편에 서라, 이런 요구를 공개된 언론 기자회견 석상에서 그렇게 어떻게 요구할 수가 있느냔 말이에요, 양자회담에서, 정상회담이?

○외교부장관 윤병세 오히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저희가 취해 왔던 입장을 그런 정상회담 과정에서 얘기해 줬을 때 오바마 대통령이 고맙다고……

○이해찬 위원 제가 보기에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요, 어렵사리 갔는데, 정말 성공하기를 바랐는데 내용이 없어요, 겉은 화려한데. 겉은 굉장히 화려한데.

전투기 기술 이전 문제도 그대로 아무런 성과가 없었지, 6자회담 문제에 관해서도 구체적인 성과는 없었지, 중국 문제에 관련해서도 이런 소리를 듣고 있지.

이렇게 말하자면 굉장히 외교적으로 수사학으로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외교부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위원장대리 심재권 이해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은 위원 박상은 위원입니다.

장관님, 조금 아까 얘기했던 핵심기술 이전 문제, 물론 이것은 국방부 소관입니다마는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알기로는 그것은 미국에서 근본적으로 기술 이전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가

능한 것으로 지금 와전이 되고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이미 벌써 국방부장관께서 오늘도 아마 답변을 하셨고 또 그동안에도 여러 번 답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방사청에서도 아마 얼마 전에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미측이 기술 이전이 어렵다고 한 입장은 이미 다 전달이 되고 또 해당되는 부서에서도 알고 있고 이렇게 설명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상은 위원 장관도 공관을 통해서 보고받았을 것 아니에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저희가 알게 된 것은 방미 직전에 알게 됐습니다.

○박상은 위원 그러면 장관은 어떤 조치를 했어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저희가 요청을 받은 후에는 저희가 해당되는 카운터파트들과 여러 레벨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시점은 이미 너무 늦은 시점이었습니다.

○박상은 위원 그다음에 제가 워싱턴에서 전화를 몇 통을 받았는데 그중의 하나가 미국에서 회의 중에 한국이 중국과 가까워지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들은 관여치 않는다, 큰 틀에서 볼 때, 그런데 중국이 잘못한 것이 있을 때는 한국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야 되지 않느냐……

누가 그 발언을 우리 대통령한테 한 겁니까, 아니면 어디서 한 겁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기자회견 모두발언 할 때 오바마 대통령이 얘기한 내용 중에 초반에는 한미 양국 관계가 역대 최강의 관계다라는 걸 강조하고 또 한국이 중국과 관계 발전하는 것을 지지하고 이것이 한미 관계, 한중 관계가 전혀 충돌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러나 국제질서·국제규범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계속 이것을 좀 얘기해 달라……

그런데 이 얘기는 왜 나왔느냐 하면 저희가 지난 EAS(동아시아정상회담) 외교장관회의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을 때 저희 입장을 분명히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측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또 이번 정상회담 과정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 줬을 때 오바마 대통령이 고맙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프리시에이트(appreciate)'란 말을 섞어서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보시면 훨씬 더 균형 잡히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상은 위원 물론 외교가 어떻게 보면 사실 수사적인 표현이 많이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다 일일이 해부학적으로 짚어서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큰 틀에서 볼 때 이번에 우리가 처음부터 정상회담 한, 원래 우리가 이게 제일 처음에 상반기에 하기로 돼 있던 건데 메르스 때문에 못 하고 연기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사이에 9월 3일 중국 전승절 우리 대통령이 천안문에 가서 서 있었고 이번에 또 펜타곤까지 가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상징적인 면이 강했다고 보는데, 그런 것을 자꾸 반감시키는, 한미 간에 좋은 우호관계를 반감시키는 것들이 참 안타까운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보완적인 것을 외교부에서 장관님이 주도하셔 가지고 제대로 전달할 수 있고 효과가 더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길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까 오늘 업무보고 중에서 한일관계를 장관께서 투트랙이라고 얘기하셨지요? 투트랙이라는 얘기는 하나는 소위 말하면 기본적인 역사 인식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일본을 설득하고 국제사회의 동조를 얻어서 끌고 가겠다, 그리고 현재 현안 문제들은 그것은 우리가 협의해서 국제 간에 균열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저희가 정부 출범하기 전부터, 인수위 때부터 지난 2년 반 동안 일관되게 유지한 입장이 바로 역사 문제에 있어서는 단호하고 분명한 입장을 취해 오지만 양국 간에 전략적인 이해를 같이하거나 또 호혜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협력을 한다, 이게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동안 한일 관계가 불편한 경우에도 사실은 여타 분야에서의 협력은 계속 진행이 되어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박상은 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이번에 한중일 정상회담, 3국의 정상회담 또 그다음에 그 와중에 잘 되면 한일 정상회담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 원칙이 계속 여기에 적용되는 거냐는 얘기예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적용되고 앞으로도 그런 기조하에서 가능하다면, 금년이 국교정상화 50주

년이기 때문에 한일 관계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개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은 위원 그것이 청와대하고도 서로 같은 공감대를 갖고 있는 겁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정부 전체가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상은 위원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는 지금 예결소위에 있기 때문에 예산 관계를 그쪽에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큰 틀에서 몇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미들 파워 국가로서 국제적인 행사를 하려면 거기에 맞는 역할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발적인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지금 이것이 확보가 다 돼 있습니까, 아니면 현황이 어떻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이미 이번 예산 신청했을 때 그 분담금 부분도 저희가 어느 정도 국력신장에 맞춰서 좀 증액을 요청한 상태이기는 합니다마는 사실상 수요는 굉장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거기에 상응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심재권 간사, 나경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상은 위원 그다음에 우리 재외공관에 국감 나가 있는 위원님들이 돌아오셔서 행정 지원에 대한 얘기를 다 하시는데, 지금 정부하고 돼 있는 예산 보면 결국은 환율 인상 문제라든가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 정도만 반영되어 있는 거지 실제로 역량 강화를 위한 인원을 늘린다든가, 또는 본 위원이 예산 할 때 인턴사원들 그래도 최대한 차비라도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은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요청을 한 것이 반영이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요청하지 않은 겁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지금 예산 측면에서는 그동안에 특히 행정직원들의 인건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죽 노력을 해 가지고 그동안 여러 가지로 역량 강화 사업으로 전환해 가지고 운영을 잘 하고 있고요. 또 현재 행정직원 보수도 중견 국가의 한 85% 정도 수준으로서 앞으로 더 제고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 당국과 협의를 하고 있고 앞으로 더 강화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인력 측면에서 그런 무급인턴 운영도 더 개선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공관의 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저희 지침도 송부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유급화를 위해서 관련 예산 3억을 확보해 놓은 그런 상태고요. 앞으로 여러 가지 인턴 문제도 관리 방안을 더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은 위원 장관이 지금 워낙 일선에서 뛰다 보니까 아마 내부 살림 확인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장관님이 직접 뛰셔야 될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번에 대통령 미국 방문 기간 중에 저한테 미국에서 전화 온 것 중에 뭐가 있느냐 하면, 그동안 사실 우리나라가 특히 코리아 파운데이션 중심으로 해서 북미 지역의 우리 한국 연구 지원이라든가 또 한국학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지만 그러나 워낙 일본과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저한테 일본 문제에 대해서 꼭 정부가 이걸 해 줘야 되겠다 하는 얘기가 있던데 장관, 이 내용 잘 알고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코리아 파운데이션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에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기관이나 학계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유엔에 갔을 때 또 그런 요청을 받은 게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 문제는 계속 우리 국제교류재단과 상의를 해서 가능한 한 필요한 부분에 효율적인 예산이 배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은 위원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예결소위에서 하니까 또 예결특별위원회에 있으니까 활동할 테니까 같이 협조합시다.

그다음에 통일부 차관, 대학생 통일교육 말이에요. 대학생들이 사회 일각의 청소년과 중간에서 역할이 중요한데 지금 대학생들, 청소년들이 남북통일에 대해서 비관적인 시각이 많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통일부에서 전체 학교 통일교육 예산, 이걸 어떻게 지금 반영시키고 있어요?

○통일부차관 황부기 하여튼 저희들이 청소년들의 통일에 대한 무관심이 지속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특히 내년도 예산에는, 통일교육의 사각지대가 어떻게 보면 대학생들입니다. 그래서 대학교에서 통일교육을 강화하는 사업을 신규로 편성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상은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남북 제2의 개성공단사업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통일 준비하려면 여기에 대한 연구비를 어느 정도 예비비를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 확보된 게 있어요?

○통일부차관 황부기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으로 확보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에 대해서도 남북관계 진전 상황을 보면서 잘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은 위원 아니, 진전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남북관계 협력하려면 경제협력이 중요한데 제2, 제3의 개성공단 준비를 해야지요.

○통일부차관 황부기 예, 알겠습니다.

○박상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경원 박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이후 시간이 좀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쉬었다가 회의를……

휴식을 위해 회의를 잠시 정회하였다가 4시 3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경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정세균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균 위원 외교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일본과 역사교과서 문제로 자주 말씀을 하시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물론 항상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적절한 계기에……

○정세균 위원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일본 지도층의 역사인식 문제라든지 교과서 검정 기준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했던 적도 있고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그렇습니다.

○정세균 위원 또 올해 초에도 일본의 역사수정주의에 대해서 우려를 표한 적 있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여러 번 있습니다.

○정세균 위원 그러니까 한일 간에 역사 문제가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 국내에서 역사교과서 문제 때문에, 사실은 2013년에 교학사 교과서 때문에 좀 논란이 있었던 것 기억하십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제가 국내 문제에 대해서 깊이 파악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세균 위원 그래서 그때 교학사 교과서 때문에 논란이 된 자세한 내용은 기억을 못 하신다 그 말씀인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제가 국내 문제까지 깊이 있게 팔로우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세균 위원 아, 그래요?

이번에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교육부에서?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세균 위원 혹시 여기에 대해서 사전 설명을 들었거나 협의받은 적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저는 전혀 상의받은 것 없고요. 또 제가 워낙 외국 출장을 많이 가기 때문에 또 그럴 기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세균 위원 그러면 외교부에 특히 따로 얘기를 하거나 그런 건 없이 그냥 교육부가 독자적으로 한 것으로 봐야 되겠구먼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사안의 성격상 저희랑 협의할……

○정세균 위원 국무회의 석상에서도 별로 논의된 적 없고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제가 참석한 경우에는 그런 것으로 기억됩니다.

○정세균 위원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외교부는 관심은 없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제가 아직까지 거기에 특별히 관심을 가질 만한 여건이 되지 못했습니다, 워낙 많이 출장을 다니기 때문에요.

○정세균 위원 지금 국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한일 간의 문제가 세 가지 큰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역사 문제, 신사참배 같은 문제라든지, 영토 문제, 그다음에 교과서 문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이 자의적으로 검정 기준을 바꾸고 학습지

도요령 해설서 등을 바꿈으로 해서 한일 간에 분쟁이 생기고 또 한일 역사 인식의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이번에 교과서를 국정화하고 그 내용이 정부에 의해서 바뀌어진다면 이것은 한일 외교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들 걱정을 하는데, 혹시 장관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문제 지적에 대해서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비슷한 취지의 또는 우려를 표명하셨는데 제가 이것을 깊이 국내까지 파악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그동안에 일본 측에서 잘못된 역사 인식에 기초해서 교과서에 대한 검정지침을 내리고 이에 따른 교과서들이 나오는 문제들하고 우리 교육부에서 지금 이렇게 추진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취지와 목표가 다르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세균 위원 그래서 외교활동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저로서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세균 위원 한번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많은 국민들께서 우리가 일본에 역사를 왜곡하지 말라, 역사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너무 간섭하지 말라고 하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 때문에 교과서 국정화가 우리 입장을 약화시킬 소지가 있다, 입지를. 그런 우려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문제는 없겠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문제가 있다 싶으면 교육부에 외교부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도 저는 적극 권면하고 싶습니다.

통일부차관께 질문하지요.

지난 8월에 경원선 남측 구간에 대한 복원사업 기공식에 차관은 안 가셨나요?

○통일부차관 황부기 예, 저는 참석을 안 했습니다.

○정세균 위원 현재 경원선 복원사업의 실무 주체가 어디지요? 경원선 복원사업의 담당 부서가 어디예요?

○통일부차관 황부기 국토부하고 해서 같이 추진을 하는데요, 시공사는 국토부 산하에 있는…… 죄송합니다. 제가 이름을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국토부 산하에 철도를 건설하는 공기업이 있습니다. 거기가 시공사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세균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은 어디서 나가요?

○통일부차관 황부기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출합니다.

○정세균 위원 그런데 남북협력기금의 주관 부서는 통일부 아닙니까?

○통일부차관 황부기 그렇습니다.

○정세균 위원 그런데 사실상 사업자를 선정하고 또 철도건설을 지휘·감독하는 것은 국토부라 이 말이지요?

○통일부차관 황부기 예.

○정세균 위원 그러면 국토부가 주무부처 아닌가요?

○통일부차관 황부기 그 사업을 경의선하고 동해선 할 때도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통일부가 이 사업 시행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에 위탁을 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정세균 위원 원래 경원선 복원사업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것은 국가 철도망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신탄리에서 백마고지까지. 이 철도 복원사업은 교통시설특별회계 사업으로 추진된 바 있지요?

○통일부차관 황부기 예, 그렇게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세균 위원 남북협력기금이 아니고 교통시설특별회계로 이 사업이 추진된 걸로 알아요. 그렇지요?

○통일부차관 황부기 예.

○정세균 위원 그러면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백마고지역에서 월정역 구간 복원사업도 원칙적으로 국토부 특별회계 사업으로 진행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통일부차관 황부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이 경원선 남측 구간 복원사업이 앞으로 남북 간의 연결 구간, 이 부분을 전제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기금에서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세균 위원 저는 이 사업에는 찬성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업의 필요성을 부정하거나 그런 게 아닌데, 이 사업은 광복 70주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을 하는데 좀 졸속으로 추진한 듯한 느낌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금액이 상당히 큰 사업인데 국토부가 5개 시행사를 수의계약으로 선정을 했거든요.

○통일부차관 황부기 예.

○정세균 위원 통일부 또한 경원선 남측 구간 복원 기공식을 위해서,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절차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것 없이 지뢰 제거 등의 경비로 33억 원을 사용한 바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통일부차관 황부기 예.

○정세균 위원 그래서 저는 본 사업은 내용적으로나 또 실제 추진 주체로 봐서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아니라 교통특별회계 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일이다. 사실상 통일부는 돈만 내고 아무 관여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맞는 거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일부차관 황부기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대로 남측 구간만 복원을 하고 끝나는 사업이면 통일부에서 기금으로 지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남북 간의 경원선 전체를 연결하는 것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세균 위원 아니, 그러면 사업 주체도 통일부가 돼야 될 것 아니에요? 왜 남북협력기금을 쓰면서 사업 주체는 국토부가 되냐 이 말이지요.

그래서 일을 빨리하는 것도 좋지만 제대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라도 통일부 기금 사업이 아니라 국토부의 교통시설특별회계 사업으로 이관하는 게 옳다고 저는 보는데 그렇게 노력해 볼 생각 없습니까?

○통일부차관 황부기 이미 기금으로 의결을 해 가지고 추진이 돼 있는 사업이고요,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하여튼 남북 간의 경원선 전체를 복원하는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경의선……

○정세균 위원 한번 검토해 보세요.

저는 통일부가 적절치 않게 기금을 쓰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국가재정법에 맞게 집행을 하는 게 옳지요?

○통일부차관 황부기 예.

○정세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천 위원 최재천입니다.

두 가지 점에서 대단히 비관적이고 혹은 절망적인데 하나는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불편하고 대단히 비관적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있었던 부분 인사 이 점에 대해서도 대단히 실망스러운데 먼저 인사에 대해서 간단히 코멘트를 하자면 이런 지정학적인 세력 전이의 시대에는 지정학적 운명을 뛰어넘는 보다 원대한 상상력과 비전 그리고 균형 감각을 가진 외교안보 정책을 설계할 수 있거나 집행할 수 있는 리더들이 필요한데 그런 점에서 지금 시간과의 경쟁에서 저는 뒤떨어지거나 패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팀이 그대로 현상 유지되고 그대로 지속된다는 현실에 대해서 대단히 절망합니다.

새로운 비전 창출 영역도 없고 외교안보적 상상력도 없는 이런 팀들과 계속 국회와 행정부 관계를 가져가야 된다는 데 대해서 대단히 슬프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우리 장관님께서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이것을 먼저 한번 물어볼까요?

지난 9월 25일 날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사이에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입장은 어땠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 당시 시진핑 주석이 아주 분명한 어조로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한반도에서의 일방적인 긴장 조성행위를 반대한다. 또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하는 행동에 반대한다. 다시 말해서 북한에 의한 이런 두 가지 도발의 가능성에 대한 강력한 경고조치를 취한 것으로 한미 양국 모두 또 국제사회가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최재천 위원 저는 사실은 아침에 오늘 신문 보면서 대단히 실망스러웠는데, 이 뻔한 사실을 왜 놓치는지에 대해서, 대한민국 전문가들이 말하지 않는 데 대해서요.

이를테면 오마바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기자회견장에서 세 번째 답변에서 이랬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말씀은 '미·중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평화적 방법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이랬지요? 그다음에 시 주석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평화적 방법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이렇게 나가요.

그런데 그로부터 불과 20일이 지난 한미 정상회담 설명서에서는 어떻게 나가느냐?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비핵화' 해 가지고 CVID가 돼 버립니다. 도대체 20일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거지요? 어떻게 하다가 '비가

역적'이라는 이 단어가 들어가 버린 것이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CVID는 한미 양국이 오랫동안 견지해 온 입장이고요, 그것은 이미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유엔 안보리 모든 이사국이 찬성한 결의안에 들어가 있고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것은 국제사회의 공통된 인식을 반영하는 문구입니다. 이미 더 이상, 한미 양국의 차원을 넘어선 문구입니다.

○최재천 위원 장관, 그러면 왜 시 주석과 오바마 대통령 사이의 기자회견장에서는 굳이 두 정상이 입을 맞춰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평화적 방법'이라는 외교적 용어를 구사했을까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계기에 항상 CVID를 다 쓸…… 'C' 'V' 'I'까지가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그중에 두 개를 쓸 때도 있고 세 개를 쓸 때도 있고, 그중에 앞의 것 두 개를 쓰는 경우도 있고 뒤의 것 두 개를 쓰는 경우, 여러 가지 유연하게 씁니다. 다만 이것을 공식적으로 쓸 때는 세 가지를 다 합쳐 가지고 'CVID' 이렇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최재천 위원 자, 장관 답변의 유연성만큼이나 외교적으로 그리고 미중 관계나 남북 관계나 그 다음에 한중 관계에서 그렇게 용어가 해석되고 그렇게 자의적으로 이용될 수 있기를 저는 꿈꿉니다.

다만 2003년 8월에 1차 6자회담이 있었을 때 그때 네오콘들이 CVID를 주장합니다. 저는 그때도 아무도 읽지 않지만 글 여러 개를 써 가지고 의원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한 적이 있어요.

2004년 6월 3차 6자회담 때 CVID라는 용어가 갖는 그 위험성을 고려해서 드디어 한국과 미국 사이에 '포괄적 비핵화'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유연화시킵니다. 그리고 2005년 4차 6자회담 2단계 회의에서 9·19 공동성명이 나오는데 그때 이것을 좀 더 단계적으로 풀어내고 유연화시켜서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 원칙이라는 상호주의 원칙으로 나아가면서 이 문제를 풀어 나가요. 유연화시켜 나가요.

통일부 차관,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다 뻔히 알잖아요?

역사에 남을 문건을 가지고 변명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부끄러운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아들 부시 시절에 이것이 네오콘식 해법이라고 온 나라가 반대하고 비판하고 북한은 리비아식 해법이라고 반대하고 그래서 포괄적 비핵화로 갔다가,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 대원칙이라는 균형 잡힌 상호주의로 갔다가, 그런 식으로 북핵 문제를 유연하게 풀어 나가기 위해서 해 온 역사가 지금 북핵 해결의 역사인데, 물론 잘못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11년 전으로 되돌리면서 '그 용어는 국제사회에서 공통된 용어야, 아무런 문제가 없어' '표현되지 않았지만 거기에 다 들어 있어' '상황에 따라 두 단어, 세 단어 골라 쓰고 있어' 이게 지금 답변입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최 위원님, 제가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이 CVID는 2006년 안보리 결의 때부터 들어간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최근 수년 동안이 아니고 이게 벌써 10년 이상 된, 저희 정부의 변화에 관계없이 취해 온 입장입니다.

○최재천 위원 그러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남북 공동성명에 이런 방식으로 CVID가 공식적으로 명시된 적은 언제고 몇 번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남북 간의 그런 차원을 넘어서 이미 국제사회에서……

○최재천 위원 자, 양국 간에 대해서만 물었어요. 한국과 미국 사이 정상회담에서 이런 방식으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 비핵화'라는 문안을 못 박은 적이 몇 차례 있어요? 언제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최소한도 아마 지난 이명박 정부부터는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천 위원 자료를 직접 제출해 보세요, 지금. 지금 충분히 제출 가능하잖아요? 저 뒤에 앉아 있는 기조실장 바로 제출해 주세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것은 저희가 찾는 대로 우리 최 위원님 사무실로……

○최재천 위원 뭘 찾는 대로입니까? 그것을 뭘 찾을 가치가 있습니까? 정상회담 공동성명이야 바로 나오는 거지.

○외교부장관 윤병세 제 머리 위에 다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중요한 문서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CVID가.

○최재천 위원 그다음에요, 저는 또 하나 힘든…… 이번에 제가 안 계실 때 대정부질문에서 이 문제를 하다가 시간이 짧아서 매듭을 못 지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염려합니다.

제가 가기 전에 중국 경사론에 지나치게 경도되어서 자칫 억지로 기계적인 균형을 잡으려다가

한미 정상회담을 망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국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미동맹 기적의 역사를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때다'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CSIS 연설에서 '한미동맹 기적의 역사를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때다', 북한은 당연히 흡수통일이라고 그럴 거고 중국은 주한미군의 지역적 역할을 확대하는 것은 대단히 전략적 도전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할 겁니다. 덧붙여서 우리 대통령께서는 미국의 아태 재균형정책의 핵심 파트너로서 대한민국을 이야기했고 오바마 대통령은 '중심적 역할'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중 관계나 남북 관계 그리고 주한미군의 문제를 뭐라 그럴까, 정말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국내적으로 자칫 주한미군 철수론으로 이어져서 냉전논리나 이른바 빨갱이론으로 이어질까 그런 염려가 있고, 국가보안법 슬픈 역사가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중국의 비개입이나 협조 없이 과연 남북통일을 우리가 안전하게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일관되게 인용합니다만 2005년 1월에 우리가 전략적 유연성을 받아들이고 주한미군이 대북 억지력에서 동북아 신속기동론으로 변하고 평택기지의 성격이 바뀌고, 그러면 우리는 나름대로 북한에 대해 설득하는 논리를 확보했다는 말이에요. 이건 임동원 장관이 늘 저한테 주의 주신 건데 '전략적 유연성을 너무 비판하지 마라. 그게 남북 관계에서는 장점이 있을 수도 있다. 주한미군이 당신들을 위해서 주둔하는 게 아니야' 그런 시사를 저한테 주신 적이 있어요, 7, 8년 전에 제가 비판할 때. 그리고 줄곧 인용을 합니다만.

이 문제를 좀 더 유연하게 다룰 수 있으려면, 우리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으려면 전작권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를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주도권을 유보해 놓은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전략적 유연성은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전작권은 반환해 버리고 이제 와서 한미동맹의 역사를…… 중국은 통일 이후에는 주한미군의 성격 변화나 전략적 고려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놓고 '한미동맹 기적의 역사를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때다'…… 물론 외교·안보적 고려 있었을 거고 중간에서 균형자적 입장에서 대단히 어려웠을 거라는 그런 고민은 이해합니다만 과연 이런 발언이 갖는 중·장기적인 위험성에 대해서 저는 우리 외교안보팀이 제대로 형량하고 있고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고 있고 이 어려움을 헤쳐 나갈 자신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는 대단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그동안 유엔총회 연설이나 이번 CSIS 연설을 포함해서 여러 계기에 한반도 통일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열망을 여러 가지 형태로 말씀하시는 가운데서 나온 것이고요. 또 그런 것에 대해서 대개들 많은 공감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특히 저희 정부로서는 지금 중국 경사론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가 한중 관계 이것을 기계적으로 균형 맞춘다 이런 것은 아니고 전략적인 로드맵에 따라서 중국 방문 또 이번에 미국 방문 또 한중일 정상회의 주최, 또 이어서 많은 여러 가지 양자·다자적인 외교 로드맵을 지금 이행하고 있으면서 이것을 어떤 다른 측면보다 우리의 주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런 외교안보환경에 맞는 대책과 선제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재권 위원 심재권 위원입니다.

한중일 정상회담이 언제로 예정되고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지금 11월 초에 되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권 위원 어쨌든 예정대로 그 무렵에 개최할 생각입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재권 위원 얼마 전에 우리 대통령께서도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리면 한일 회담도 열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한일 정상회담도 준비하고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제가 누차 여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의미 있는 정상회담이 되려면 양자 간 주요 관심사와 현안 문제에 대해서 진전된 것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여러 번 하고 있고요. 이번에 또 대통령께서 방미 중에도 그런 취지의 얘기를 CSIS 연설 또 질의응답 과정에서 말씀하시고 그런 일관된 입장을 갖

고 있습니다.

○심재권 위원 이번에 가을제사 맞이해서 야스쿠니신사에 아베 총리가 또 공물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아베 총리의 행태는 이번 한중일 정상회담 또는 한일 정상회담과는 무관합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저희가 어제 이미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일본 제국주의의……

○심재권 위원 아니, 제가 여쭙는 말씀은, 야스쿠니신사에 공물 보낸 것에 대해서 외교부에서 비난하는 성명 봤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야스쿠니신사 공물 납부가 한일 정상회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저희가 이런 올바른 역사인식을 일본 정부에 늘 요청하고, 요구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러한 행동이……

○심재권 위원 장관님, 정말 명확하게 제가 여쭙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길게 부연설명 하시는 가운데 핵심을 비켜가고 있습니다.

자, 야스쿠니 공물은 한일 정상회담과는 관계 없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 결코 도움이 되는 조치가 아닙니다. 오히려 거꾸로 가는 조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심재권 위원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어느 정도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동안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여러, 아홉 번에 걸친 국장급 협의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때로는 진전을 보이고 있다가 또 때로는 약간 정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진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심재권 위원 우리 정부가, 대통령께서 '위안부 문제의 해결이 한일 간의 관계 정상화에 가장 으뜸 되는 문제다'라고 누차 말씀해 왔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아베 총리, 이렇게 면전에서 다시 야스쿠니신사에 공물을 바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우리 정부는 한일 정상회담을 할 생각입니까?

그렇게 하려면 국민들에게 설명이 있어야지요. 왜 정부의 입장이 이렇게 바뀌었고 왜 이제 한일 정상회담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어떤 결정이, 어떤 판단이나 결정이 있을지 없을지 두고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상황에 맞춰서 설명이 필요할 경우에는 하고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연히……

○심재권 위원 저는 아주 잘못된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11월 초에 있다는 한중일 정상회담 공식명칭이 뭡니까? 한·중·일입니까, 한·일·중입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원래 저희가 처음에 출범할 당시에 '한·일·중'으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일·중 정상회의가 맞습니다.

○심재권 위원 한·일·중 정상회의가 맞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그건 하나의 기술적인 이유입니다.

○심재권 위원 글쎄요, 그런데 우리 정부가 간혹 '한중일 정상회담'으로 표현하고 있고 또 때로는 오늘 보고하신 내년도 예산 관련 정책보고에는 '한·일·중'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질문해 주셨지만 황교안 총리의 지난번 발언,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장관께서도 '우리의 동의가 있으면' 이런 말씀을 늘 하십니다. 어떤 경우에 우리가 동의를 할 수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기본적으로 주권이나 국익과 안보 관련된 측면에 있어서는 어떤……

○심재권 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전가의 보도처럼 늘 답변하시는 것, 우리 정부에 대한 사전요청이 있어야 하고 우리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어떤 경우를 상정합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일반적인 측면에서의 것은 저희가 다 항상 하는데 세부적인 상황에 대해서 일일이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분명한 것은 이것이……

○심재권 위원 장관님,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행정부 인사들이 답변하실 때 어려운 답변이 나오면 '지금 이 상황에서 이야기하기는 적절치 않다'라든가 '예단해서 이야기하기는 적절치 않다' 라든가 이런 말씀들 자주 하십니다. 총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할 때 최소한 그런 태도를 보였어야지요. 어떻게 일본 자위대가 '필요하다면 우리나라에 상륙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지금 장관님 말씀하시는 그런

정도 답변을 하셨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일본 자위대 우리나라 상륙은 허가할 수 없다'라고 답변해야 저는 우리의 정신을, 우리의 혼을 제대로 이야기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만약 그런 것이 외교관계상 적절치 않다면 장관님 자주 쓰시는 말씀 최소한 그런 정도는 답변을 해야지요.

일본 언론이 대서특필 하는 것 보면서 뭐라고들 이야기합니까? '그건 그 나라 정부의, 그 나라 언론들이 하는 이야기일 뿐이지 사실관계가 다르다' 우리가 백번 이야기해 봐야 뭐해요. 일본에서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세계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 잘못이고 황교안 총리 잘못이지요.

참으로 유감스럽고 그런 점에 대해서 저는 우리 장관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바로잡아 최소한 우리 외교부라도 올바른 입장을 말씀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예단해서 지금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저희 정부가 그동안에 취해온 분명한 입장을 과거, 현재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지켜나갈 것입니다.

○심재권 위원 박근혜 대통령 미국 방문, 한미 정상회담, 정말 자화자찬도 도가 지나치게 그렇게 미화돼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하나하나 묻지는 못하겠고요. 뭘 잘했다는 겁니까? 아까 장관께서도 오바마 대통령이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지금 회견장에서의 세세한 분위기,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그런 문제를 이야기했잖아요. 국제법을 어긋난 중국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미국과 궤를 같이해 줘야 된다 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지금 미국에 가서 받아올 답안지입니까? 잘못됐지요?

또 6자회담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6자회담 내용 하나하나 뜯어보십시오. 저는 CVID 이런 문제, 옳고 그름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북핵 문제 접근해 가지고 어떻게 북핵 문제 풀어가겠다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요 우리 정부에서 요청했다가 미국 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그런 합의를 이끌어 낸 것에 불과합니다. 어떻게든 우리는 대화를 만들어 가야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위원님, 제가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이번에 한반도 북한·북핵 관련된 공동성명은 기본적으로 심 위원님이 주창하시는 그런 측면도 반영이 된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북핵 고도화에 대한 우려와 거기에 대한 대응책 그런 걸 충분히 집어넣고 특히 이란 핵협상 타결 후에 이런 시급성을 염두에 두고 최고의 시급성을 가지고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다룬다는 그런 의지가 성명에 반영된 것이고요. 또 더불어서 앞으로 북한이 잘할 경우에 밝은 미래를 우리가 열어 줄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같이 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균형이 된 그런 성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심재권 위원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한마디로 늘, 어떤 때 우리 정부의 정책들이 빛 좋은 개살구 격이 되듯이, 속 빈 강정이 되듯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도 또 한 번 그런 실망스러움을 되풀이했다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분만 쓰겠습니다.

○위원장 나경원 예, 1분…… 다른 분들 다 안 드렸는데……

○심재권 위원 보충질의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경원 오늘 보충질의를 안 하신다 그러니까 특별히 1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권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지만 통일부 차관님!

○통일부차관 황부기 예.

○심재권 위원 이 DMZ 세계평화공원 예산, 이제는 삭감해야 됩니다. 2년씩이나 그대로 불용으로 넘긴 예산 왜 또 올립니까?

이것 관련해서 또 외교부·통일부 예산 관련 여러 문제들은 서면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경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신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경민 위원 한미 정상회담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장관께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은 일단은 대북 강경이고요. 오바마 대통령이 자기 입으로 직접 '미국은 중국이 국제규범과 법을 준수하

는 것을 원한다'라고…… 이게 지금 미국 관료들, 고위관료를 포함해서 여러 번 얘기가 여러 해 동안 나왔는데 일단은 그 입술의 책임자가 오바마까지 갔다는 큰 의미를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읽은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또 이것을 가지고 자화자찬하고, 지금 정부가 제일 자화자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북한에 관해서 별도의 성명이 형식적으로 있었다는 것인데 이것은 정말로 형식적인 것이고요. 이게 처음이라고 자꾸 주장을 하시는데 제가 몇십 년을 외교부를 관찰한 결과는 처음은 아니고요. 한번 뒤져 보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인 것을 가지고 자꾸 실질을 압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외교가 경계해야 할 대목인데 우리 외교가 아전인수, 견강부회, 자화자찬, PR에 너무, 홍보에 너무 치중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금…… 저는 그것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대북 강경 일변도가 일단 오바마 입장에서는 자기 할 말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외교가 지금 결국은 중국 경사론을 불식했다고 평가하는데 워싱턴 포스트의 나카무라 백악관 출입기자가 쓴 것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기사 읽어보셨지요, 데이비드 나카무라?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신경민 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장밋빛으로만 가시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것 이러다가 틀림없이 한중 해양경계획정협상이 있고 진실의 순간이 곧 다가오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조금 톤을 낮추실 것을 권하고요.

이래 가지고 무슨 6자회담이 되겠습니까? 지금 입만 열면 6자회담 말씀을 하시고, 지금 아마 관계자들이 뒤에 있을 텐데 잘될 것 같지가 않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한 말씀만 짧게 하시지요. 제가 지난 얘기는 대충 들었으니까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지금 6자회담에 어떤 나라들보다도 한국 정부가 이 프로세스를 움직이기 위해서 상당히 주도적인, 능동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것은 제가 지난 2년 반 이상 동안……

○신경민 위원 아니, 그렇게 하셨는데 이번 한미 정상회담 스테이트먼트(statement)는 반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운전석에 누가 앉아 있고 운전을 무슨 지도를 보고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엉터리 지도가 어디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미국 정부가 '어트모스트 어전시(utmost urgency)'라는 말을 공개적인 문서에 쓴 것은 처음입니다.

○신경민 위원 글쎄요, 어트모스트 어전시라는 것이 문서에는 혹시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미국의 조야가 바뀌었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고요. 아마 미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인가 카네기홀에서 세미나를 하는 모양인데 그것 한번 잘 보시지요. 한번 같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제가 맞을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요. 그것 같이 한번 잘 보시기를 바라고, 이 문제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제가 지켜본 수십 년 동안의 한미 정상 외교 중에 그냥 한 점으로 지나가는 것이지 이게 그렇게 어트모스트 어전시라는 발언을 했다고 그래서 미국의 조야가 확 바뀌는 것은 저는 꿈에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KOICA의 새마을운동 얘기를 지적한 적이 있는데 이것은 또 다른 문제고 그것하고도 약간의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 외교부가 원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KOICA 민간협력사업 2016년 예산이 외교부의 민간경상보조금사업으로 변경이 됐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지금 외교부가 원한 겁니까, 아니면 기재부가 이렇게 한 겁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일단 기재부에서 그렇게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신경민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ODA 사업이라는 특성이 있는데 다른 민간위탁사업하고 지금 똑같이 인식을 하는 것이고요. 이래 가지고 이게 잘 되겠어요, ODA가 추구하는 가치가 있고 사업의 성격이 있는 것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을 외교부가 그냥 바뀐 것을 혹시 인조이하시는 것 아닙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것이 갑작스럽게 내년 초부터 집행될 경우에 여러 가지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또 해당되는 민간단체가 한 150여 개 되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로서는 이러한 것을 준비하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해서 가능하다면……

○신경민 위원 아니, 그렇다면 설득을 좀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가면 이제는 정

부, 그게 외교부일 수도 있고 다른 정부기관일 수도 있고 ODA 민간단체 통제하일 수도 있고요, 또 휴지기가 발생하면 사업기간이 8개월 수준으로 단축될 수밖에 없는데 이래 가지고 신축성이나 유연한 사업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점점 ODA는 불가능해지는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지난번에 제가 새마을운동 가지고 지적을 했는데 그런 우려도 훨씬 더 높아지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이것은 아직 시간이 조금은 있을 테니까 다시 한 번 기재부 쪽하고 얘기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신경민 위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이것은 좀 봐 주십시오. 살펴봐 주십시오.

민주평통에서 지난번에 제가 현경대 수석부의장 얘기를 했더니 수사가 종결이 됐다고 했는데 그 뒤에 보도를 보니까 검찰은 수사 중이라고 그러고, 박찬봉 사무처장은 누구한테 그렇게 허위정보를 들으셨습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박찬봉 제가 수사가 종결됐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없고요.

○신경민 위원 아니, 그렇게 수사가 끝났다고 말씀을…… '종결'이라는 표현을 안 쓰셨다고 주장을 하시는 것 같은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박찬봉 수사가 끝났다는 말씀도 안 드렸습니다.

○신경민 위원 아니, 끝났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박찬봉 아니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신경민 위원 이렇게 되면 또 속기록을 봐야 되는데 지금 그 시간은 없으니까요.

그러면 지금 수사받고 있습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박찬봉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사가 현경대 수석부의장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다른 피의자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나온 얘기를 가지고 하는 것이지 현경대 수석부의장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경민 위원 그러면 그것은 확인해 보십시다.

하여튼 현경대 수석부의장이 수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검찰관계자의 얘기를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 신문 한번 읽어 보시고, 그렇게 어영부영 말장난으로 넘어가지 마십시오.

수석부의장 해외 대북강연 일정이 아직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하반기에 있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박찬봉 예, 있습니다.

○신경민 위원 내년도에도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던데 20회 개최에 2억 8900만 원, 맞지요? 이것 이런 분 갖다가 하면 이것 예산 삭감하든지 없애든지 그래야 됩니다. 이것 강연자 분명하게 잘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한동윤 간사 해촉 약속해 놓고 왜 안 합니까? 지금 우리가 잊어버렸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박찬봉 아니요, 해촉을 약속드린 적이 없습니다.

○신경민 위원 아니, 또 왜 이래요? 그것도 또 속기록 봐야 됩니까? 박찬봉 처장은 우리 머리를 좀 의심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도 대충 그런 정도 지능은 갖고 있습니다. 자꾸 그렇게 우기지 마시고 이것 똑바로 하시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박찬봉 아니요, 저는 해촉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신경민 위원 아니, 다른 분이라도 하셨을 거예요. 이것 하여튼 확인하겠습니다, 말씀 안 했다고 자꾸 주장을 하시니까 그러는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박찬봉 예.

○신경민 위원 통일부는, 손광주 이사장 추천했다는 통일부장관의 경위를 죽 보면, 제가 시간이 없어서 경위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마는 황 차관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이게 지금 장관이 거짓말을 하다가 거짓말을 낳고 또 거짓말이 들통이 나고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급기야는 추천과 제청을 헷갈렸다고 수습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것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되면 이것은 저희들이 비상한 수단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분명히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거의 내지 않은 자료하고 비슷한 답변이 왔는데 이것 다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 통일부가 8월 달에는 열심히 정부가 동원해서 막더니 여전히 또 날리고 있어요. 이것도 이것인지 저것인지 분명히 해 주시고요. 이것 계속 이렇게 할 겁니까? 그리고 앞으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단체에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라고 지원 재단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실에 민간단체협력사업 정치적 중립성 강화 방안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5000만 원이 세 군데 단체에 갔어요, 북

한전략센터, 탈북민자립지원센터, 탈북인연합회. 이것도 또 잘 몰랐다고 얘기하실 겁니까?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단체들이, 북한민주화추진연합회 이게 지금 전단 살포 단체에 버젓이 이름을 올리고 있어요.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통일부차관 황부기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신경민 위원 그러면 분명히 하시지요.

○통일부차관 황부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민 위원 만약 계속 하시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은 예산이 나갈 수 없다는 것 분명히 아시지요?

조금 이따 다시 몇 가지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나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영 위원 외교부장관께 질문드리는데요, 앞에서 한미 정상 외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습니다. 대체로는 이번 방미 성과에 대해서 긍정 평가, 일부 부정 평가가 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국제규범에 위배되는 데 대해서 입장을 분명히 밝혀라라는 것을 부담으로 안고 온 것 아니냐 또 F-X사업과 관련해서 핵심기술을 이전해 줄 수 없는 줄 알면서도 매달리는 것처럼 보였고 결과적으로 아무 성과도 없었다 이런 조금 부정 평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성적을 매겨 보면 그래도 긍정 평가가 더 높을 수밖에 없는 방미 외교성과를 거두고 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국제규범을 위배하는 데 대해서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하라는 그 부분 있잖습니까? 그것을 그렇게 큰 부담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인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렇지 않습니다. 자꾸 그런 문제를……

○이주영 위원 그러니까 국제규범이라는 것이 다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거기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을 때 또 우리 국익과 직결되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국익 보호·증진 차원에서 얘기를 분명히 할 것이고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제가 해 왔고요……

○이주영 위원 중국 어선들의 불법어업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얘기해 왔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불법어업 문제뿐만이 아니고 남중국해 문제에 있어서도 지난 8월 초 바로 EAS 외교장관회담에서 저희 입장을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미국을 포함해서 많은 나라들이 상당히 평가를 한 적이 있고……

○이주영 위원 이것을 자꾸 큰 부담을 안고 왔다고 평가하는 데 대해서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굳이 부담으로 생각할 필요 없이 우리가 해석하는 국제규범, 그 입장에 따라서 또 때에 따라서는 얘기 안 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 바람직한 경우들도 있을 수 있겠지요. 또 때에 따라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우리 국익 보호나 증진에 도움이 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사안에 따라서 지혜롭게 대처하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산에 대한 부분인데요, 제가 국회 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의 회장을 맡고 있는데 우리 국회 의원연맹하고 관련된 국제기구들로 유니세프가 있고 WFP가 있고 또 UNFPA가 있습니다, 인구기금. 있는데 아까 장관께서 보고하실 때에도 이번 유엔 개발정상회의에서 내년부터 15년간 시행할 유엔의 큰 프로젝트 SDGs에 대해서 우리가 경제규모에 상응하는 만큼의 국제적인 책무를 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하셨고 또 그에 상응하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유니세프 본부의 부총재를 비롯해서 시리아사무소장, 북한사무소장, 동북아시아를 관장하는 일본 동경사무소장 등등이 우리 국회 CPE를 방문해서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한국이 말만 그렇게 할 뿐이지 제대로 된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유니세프는 정규 기여금 규모가 작년하고 금년도에 390만 불인데 내년도에도 그대로라는 겁니다, 3년째 390만 불로 가고 있다.

이 ODA 부분은 우리나라가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할 때 GNI의 0.25%까지 기여금을 내도록 하겠다라고 공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몇 %입니까? 그리고 왜 이렇게 국제사회에서 제대로 한국이 역할을 못 한다는 말을 자꾸 들어야 되느냐는 겁니다.

물론 외교부에서는 증액하려고 많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당국에서 어려운 사정을 감안

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증액 실현을 해 줘야 되겠다 하는 의견을 피력하고, 이 UNFPA는 더 낯이 뜨거워요. 1년 기여금이 10만 불밖에 안 됩니다. 이게 외교부 예산입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나가고 있는 예산입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주영 위원 하시고, 외교부 예산이면 이 10만 불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과거에 인구계획을 실현할 때는 이 기관으로부터 엄청나게 원조를 많이 받아서 인구사업을 해 왔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출산을 장려하면서 또 출산을 억제해야 되는 나라에 기여를 해야 되지요. 그런데 이게 10만 불이 뭡니까? 제가 지난번 유엔 총회에 가서 UNFPA 총재를 만났는데 한국 정부에 대해서 엄청나게 실망스러운 얘기를 하는 말씀을 듣고 제가 낯이 좀 뜨거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WFP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것은 통일부하고도 다 관련이 있습니다. 북한 영유아 영양지원사업 이 부분 그리고 물 위생 때문에 아이들이 설사·결핵에 많이 걸려 가지고 5살 이전에 사망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점들, 워시(WASH) 사업하는 것을 통일기금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들쭉날쭉입니다. 이런 부분들 좀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예산소위 논의 과정에서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미래전략센터가 금년도에 출범해 가지고 상당히 좋은 활동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아프리카 진출이 중국이나 인도나 일본에 비해서 많이 뒤떨어져 있는데 그 원인은 주로 정보와 그 지역사정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그 원인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아프리카 진출 규모를 보면 전체 무역고나 투자액 중의 그 지역 진출규모가 2% 수준입니다. 세계 평균을 내 보더라도, 별로 지원 안 하는 나라까지 다 포함해서 계산을 하더라도 평균 3, 4%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많이 진출을 해야 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2%밖에 안 돼서 평균에도 미달된다고 하면 이것 심각하게 국가전략 차원에서 재고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점이다 하는 지적을 드리면서……

그런데 예산이 금년도 사업예산이 18억 8000이었는데 내년도에 이것을 줄여 놨어요. 1.3억을 삭감해 가지고 17억 5000을 계상해 놓고 이렇게 국회로 넘어왔는데 이것 안 됩니다. 늘려가야 되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아프리카 진출 전략을 제대로 세워 가겠습니까? 이 부분도 논의를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외국민 범죄피해 보호예산, 이것도 범죄는 해마다 자꾸 늘고 있거든요. 작년도 5952명, 그 전년도 4967명……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전년도 4567명 이렇게 계속 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내년에 14억 1000만 원 감소된 예산으로 102억 9000만 원을 88억 8000만 원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것도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제대로 인력 확보도 하고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몇 가지 더 있는데 제가 서면으로 할 테니까 예산소위에서 정부 입장을 좀 더 명확하게 밝혀 주시고 또 나중에 예결위 대책까지도 같이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경원 이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世淵 委員 외교 현안들에 대해서는 이미 앞서 많은 질의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주로 예산 쪽에 초점을 맞춰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주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다시피 우리가 지금 여러 국제기구의 분담금을 이렇게 소홀히 해서야 과연…… 장관님께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얼마 전에 유네스코에서 한일 간의 이런 여러 외교력 경쟁이 벌어질 때 미국이 유네스코 분담금 납부 중단을 한 이후에 일본이 분담금을 제일 많이 내고 있는 입장에서 큰소리를 막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외교부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회에서 이렇게 비슷한 내용들로 반복적으로 지적받기 전에 좀 더 준비를 철저하게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보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유엔협회세

계연맹이라고 잘 아시지요, 장관님?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金世淵 委員 유엔 로고와 명칭을 사용하도록 허가된 유일한 비정부기구입니다. 그래서 각국의 유엔 협회를 회원으로 해서 46년도에 설립이 되었고요. 특히 NGO들이 다 모여 있기 때문에 전통외교의 어떤 일원화된 외교 방식에서 벗어나서 지금 아주 다양화된, 다원화된 시민사회와의 교류 속에서 공공외교가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외교부에서도 중점적으로 공공외교를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 역할을 몇십 년 전부터 해 오던 것이 WFUNA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여기 회장과 부회장을 동시에 맡고 있을 정도로 우리가 지금 활동 폭을 넓혀 놓은 상태인데요.

우리가 2009년부터 박수길 전 유엔대사님이 회장으로 선출돼서 두 차례나 연임을 해서 올해까지 임기를 가지고 활동을 하고 계시고 조창범 전 호주대사가 3년 임기 부회장에 선출이 되어서 이례적으로 회장·부회장을 동시에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여금 부담 현황을 보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40만 불을 내고 2013년부터 2015년까지 12만 불을 내다가 내년도 편성 안에는 지금 한 푼도 없습니다. 이런 행태를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한다면, 지금 정부 편성 안이 이렇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도대체 무슨 평가를 국제사회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내릴지?

지금 WFUNA가 서울시와 함께 제3사무국 신설을 검토하고 있어서 한국의 역할과 위상이 성공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인데 여기에 대해서 외교부가 인식이 너무나 결여돼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외교부의 2010년부터 기여금 40만 불을 납부할 때의 판단 근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책임 있는 중견국으로서 국제평화·안보에 대한 우리의 기여를 강화하기 위해 유엔을 위한 범세계적 시민운동 증진을 추진하는 WFUNA 활동을 지원하고자 2010년부터 기여금을 납부하고 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뚝 잘라서 한 푼도 안 내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도무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적어도 전년도 수준, 그리고 바람직하게는 이전에 우리가 활발하게 납부하던 수준까지는 가야 되겠다…… 이게 사실 40만 불 해도 3~4억 원 가지고 이런 말씀 드린다는 게 참 말씀드리면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험지 공관 근무자 처우 개선에 대해서 국감 직후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생필품 구입 지원이 중단된 것, 2011년 1월에 특수지 제도개편 때 99개 지역이 55개로 줄어들면서 발생한 문제이지요. 또 임차료를 공무 수행상 해외 파견가 있는 해외 근무하는 우리 외교관들이 자부담으로 부담하고 있고 환차익은 또 환수당해서 현지 인플레로 인해 실질적인 소득 감소가 발생하는 이런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안타깝게도 아프리카에 근무하시는 외교관의 배우자가 풍토병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88억 잡혀 있던 것이 131억으로 지금 증액되어 있습니다만, 적어도 우리가 같은 입장은 아닙니다만 KOTRA의 경우에 외교부보다 주택임차료 기준이 높습니다.

즉, 보다 현실성 있는 현지 생활수준을 고려해서 이것이 더 나은, 더 아주 사치스러운 주거로 옮기겠다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주거를 유지하는데 인플레나 환율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서 자부담 하거나 또는 소득이 환수당하고 있는 부분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외교부가 KOTRA보다 못한 기준으로 주택임차료 책정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결소위 때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논의가 있을 때 정부에서는 충실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세안문화원 건립에 원래 신청액이 198억 원 잡혀 있던 것이 대폭 삭감이 되어서 지금 총사업비가 절반이 깎여 나가서 100억 원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에 있었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했던 아세안 10개국의 정상들 앞에서 우리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년 12월 12일에 특별정상회의 제1세션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017년 이곳 부산에 건립될 예정인 아세안문화원은 국민 교류 활성화와 상호 이해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발표를 하셨고요. 같은 정상회의 때 공동성명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여기의 제4항제8호에서 '한국 내 아세안 및 동남아 문화 이해 제고를 위한 아세안문화원 건립 제안을 평가한다'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안이 예산안 편성된 것을 보면 19억 원이 추가되어 있는데 원래는 117억 원이 증액되어야 되는데 98억 원이 깎여 나갔습

니다.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나 하면 원래 지상 5층, 연면적 5000㎡에 시설비 176억 등이 잡혀 있었는데 이번에 깎인 내역이 지상 5층 건물, 5000㎡가 지상 4층 3960㎡로 깎여 나갔습니다.

그래서 부지 조성 2억, 시설비 88억 등 이렇게 잡혀 있는데, 여기에 한 300평 남짓이지요, 1000㎡ 정도이니까. 여기에 빠지는 시설들이 어떤 거냐 하면 세미나실, 어학강의실, 문화체험실, 공연장, 바로 우리 대통령께서 10개국 정상들 앞에서 약속을 하신 내용들이 다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이대로 가도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심각히 한번 재검토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장관님께서는 이 심각성을 고려하셔서 원안대로 증액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정부 입장을 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국립외교원의 외교관 후보자들 중에서 지금 10% 정도는 탈락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국감 확인 시에 JPO하고 연결을 하는 게 좋겠다고 아이디어를 드렸습니다만, 15명으로 티오가 지금 감소되어 있는데 여기 15명 티오 안에서 국립외교원 출신들을 이 티오에 집어넣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인데, 그때 말씀드렸던 국력보다 더 큰 외교력을 우리가 갖추기 위해서는 적어도 유엔 분담금 비율보다는 더 많이 유엔의 각종 기구에 직원들을 진출시켜야 하는 당위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5명을 한 10명 정도 증원을 시키면서 이 중에 한 3~5명 정도 국립외교원 출신 외교관 후보자 중에서 탈락하는, 꼭 탈락자만이 아니라 상위 석권, 성적 거두는 분이 이쪽에 또 국제기구로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한번 진지한 검토를 해서 입장 변화를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통일부차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겨레고등학교하고 여명학교 차이 아시지요?

○통일부차관 황부기 예.

○金世淵 委員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한겨레고등학교에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충분한 교육 지원이 되고 있는데 여명학교는 통일부가 지원한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불이익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일부에서는 사명감을 가지시고 어떤 부처에서 지원하는 학교에 다니느냐에 관계없이 탈북 청소년들이 차등 없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통일부에서 이번에 예산 증액을 꼭 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결소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부처 입장이 명확히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통일부차관 황부기 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金世淵 委員 나머지 사항들은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나경원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우 위원 외교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주한미군 주둔협정이라고 있지요, SOFA?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김영우 위원 이것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미군 사격장이 있어요. 어디 있는지 혹시 아세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아마 지금 위원님 지역구 쪽이 그쪽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우 위원 확실히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게 여의도의 4배보다도 더 큽니다. 4배 이상인데, 400만 평 이상의 로드리게스라고 하는 미군 사격장이 있습니다, 포천에.

그런데 문제는 이 사격장 주변 마을로 자꾸 오발탄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1년 동안에 무려 다섯 번이나 오발사고가 났어요. 철갑탄, 또 무슨 대전차 훈련탄, 도비탄 이런 게 떨어져 가지고 주택이 부서지고 또 주택가에 떨어져 가지고 땅바닥이 파이고 이래 가지고 다섯 번이나 그런 사고가 났는데 이것은 SOFA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게 군이 관리하는, 국방부가 관리하는 우리 군의 훈련장 같으면 피해대책도 빨리 세워질 것 같고 그다음에 보상도 빨리 이루어질 텐데 이것이 미군 사격장이라는 이유 때문에 무슨 조사한다 그래 놓고도 조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습니다, 1년이 넘었는데. 우리 외교부의 대응이 너무나 미흡하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화면을 잠깐 봐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작년 11월에 떨어진 겁니다. 저게 영북면 야미리에 있는 에어컨 사무실로 철갑탄이 날아들어가 가지고 유리창이 깨지고 천장에 박힌 거예요.

그다음에.

그래 가지고 SOFA 회의가 열렸어요, 그런 사고가 난 다음에. 하지만 SOFA 회의가 열리고 나서 우리 외교부에서 보도자료를 딱 냈더라고요. 뭐라고 냈느냐 하면 '이 같은 사고가 주한미군 사격장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전혀 대책이 강구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네 번이나 떨어졌는데……

그런데 이것이 위험한 것이 다섯 번 중에 네 번은 620명 정도의 주민이 살고 있는 야미리라고 하는 데 집중적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정말 이것이 사람한테 떨어지면, 사람이 맞게 되면…… 기억나시지요? 2002년도에 효순이·미선이 사건이, 아까운 어린 여학생들도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한미동맹에 있어서도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했었습니다, 반미 감정이 극에 달했고.

그래서 저는 걱정이 돼요. 지금 우리 대통령께서도 한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미 정상회의 하고 오셨지요. 하지만 아무리 회담 잘하고 와도 현장에서 만약에 정말 이런 대형사고가 난다면 저는 언제든지 한미동맹 흔들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SOFA 회의할 때마다 회의해 가지고 재발 방지하겠다고 그러고 조사·발표하겠다, 조사하겠다고 하지만 한 번도 제대로 조사·발표를 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다음.

올해 3월에 저것도 야미리에 있는 주택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천장이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그래서 노부부가 입원까지 했는데, 저것도 피해보상이 너무 늦게 이루어져 가지고 제가 나서서 법무부에 얘기하고 국방부에 얘기하고 그래 가지고 간신히 이전보다는 보상 시기를 그래도 조금 앞당긴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 사고가 일어난 다음에도……

그다음에 또 한번 보여주세요.

그다음에 SOFA 회의를 해 가지고 저기도 1년 전에 했던 SOFA 회의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 회의를 매년 하는지 모르겠어요, 1년에 두 번씩. 여기서도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우리 정부와 단계별로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 무슨 협력을 해 나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한미동맹을 이야기하는지……

저는 정말 한미동맹이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의 주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중요한 한미동맹이 이러한 사고에 의해서 금이 갈 수 있다, 우리 외교부가 정말 이렇게 SOFA 회의 1년에 두 번씩 하면서 똑같은 보도자료나 내고 이럴 때가 아닙니다.

이번 10월에도 미 훈련장에서, 똑같은 이 훈련장에서 야간 사격을 합니다. 밤새도록 합니다, 낮에도 쏘고. 그래서 지금 인근 지역 주민들이 촛불시위 준비하고 있어요. 그것 아세요? 아마 처음 듣는 얘기일 거예요, 보고도 안 됐고. 그것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미군이 와서 훈련해 주고 이런 것은 너무나 고마운 일이지만 인근 지역 주민들이 총알이 떨어지는 데에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 마을이 사격장보다 훨씬 오래 전부터 있어 온 마을이고 거기에 100년이 넘은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영평초등학교라고. 그런데 그 초등학교 위에서 수업 중에도 헬기가 헬기 사격을 하기 때문에 애들이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전혀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 헬기 항로를 좀 조정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얘기하는데 한 번도 들어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100년 넘은 학교가 문을 닫게 생겼어요.

상황이 이런데 우리가 어떻게 안심을 하고 살겠나…… 전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밤 10시까지는 모르겠어요. 훈련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새벽 1시, 2시, 3시, 4시, 낮에는 농사짓는 분들이 밤에는 좀 잠을 자야 되잖아요. 또 낮에 학교 위에서 사격을 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SOFA에서 다뤄 줘야 됩니다. 회의하고 난 다음에 똑같이 재발 방지 약속하고 조사한다고 그래 놓고 1년이 넘도록 발표한 적이 없고 주민들한테 어떠한 조사 결과가 통보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지금 촛불집회를 하겠다고 이렇게 나서는데 제가 말릴 재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생명과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다만 제가 염려하는 것은 외부 세력이 또 이런

상황을 악용할까 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여태까지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여 왔는데 이제 저도 거의 두 손 들게 생겼습니다.

외교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말씀을 제가 듣고 지금 굉장히 아주 무거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3월 하순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다행히 과거 어느 때보다 빨리 법무부에서 배상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단축해서 배상액을 지급했습니다마는 최근 발생한 그런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SOFA 채널을 통해서 미측에다가 계속 촉구 중에 있습니다.

○김영우 위원 그런데 전혀 지금 반응이 없습니다, 반응이 없고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그래서……

○김영우 위원 마지막 자료 한번 보여 주세요.

이게 또 진짜 위험한 것은 야미리에 뭐가 있느냐 하면 주유소, 또 한화의 화약저장고도 있고요, 변전소도 있고, LPG 충전소도 있고 저런 게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저기에 만약에 포탄이 떨어지면 이것은 아주 대형사고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정말 천운이지요, 어떻게 보면. 가축 축사에 떨어지고 또 지붕에 떨어졌지만 노부부가 정말 운 좋게도 직접 이것을 맞지는 않고 집만 부서졌어요.

저게 화약고에 떨어지고 변전소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미동맹은? 반미 감정은 어떻고 또 아까운 생명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외교부가 SOFA 회의 한다고 그래 놓고 맨날 똑같은 회의 하고 똑같은 보도자료 내고 정말 답답한 지경입니다. 그래서 장관께서 정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SOFA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아요. 몇 가지 안 됩니다, 한 네 가지밖에 안 돼요. 헬기 항로 조정하고 그다음에 오발탄 이게 왜 일어나는지 확실한 답변을 달라, 또 오발탄 난 것은 사용하지 말게 해 달라, 이런 등등입니다.

이것이 SOFA 안건으로 반드시, 다음에 196차인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지금 196차, 예.

○김영우 위원 거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것은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김영우 위원 저도 보충질의가 없기 때문에 1분만……

○위원장 나경원 예, 2분 추가해 주세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앞으로, 다음번에 196차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 196차 합동위 의제로 상정하는 방안도 국방부 등 관계 부처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김영우 위원 그것을 반드시 안건으로 올리시고요, 회의를 하시고.

정말 진정한 대책에 대해서, 이게 보도자료를 통한 대책이 아니고 진정한 대책에 대해서, 재발방지에 대해서, 또 그간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한테 반드시 명확하게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근지역 주민들 불안해서 살 수가 없고요, 그리고 시위 이것 계속될 겁니다.

그리고 이 시위가 지역에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도 국방부 앞에서 한번 했는데 이제 외교부로 온다고 그래요. 이게 미군 사격장이라는 것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확실한 대책을 세우시기 바라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은 통일부와 관련된 예산 문제입니다마는 탈북청소년학교 중에서 하늘꿈학교 있지요, 통일부 차관님?

○통일부차관 황부기 예.

○김영우 위원 하늘꿈학교, 정부의 예산 지원과 관련된 사항은 제가 서면질의로 하겠습니다.

○통일부차관 황부기 예, 감사합니다.

○김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경원 김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는 최재천 위원님 한 분만 계신 것 같습니다.

최재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5분 드리겠습니다.

○최재천 위원 죄송합니다, 다 하시는 줄 알고.

속없는 사람 됐네요.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만 저는 마지막 사실 기대를 했거든요. 오바마 대통령 남은 14개월,

15개월 이 정도 되나요? 6자회담 조건이 좀더 낮아지고 북핵 평화적 해결의 모멘텀이 마련되기를 기대했는데 그게 되지 못한 실망감은 대단히 큽니다,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당분간 계속해서 급변 사태-북한 붕괴-흡수통일-통일 대박으로 이어지는 전근대적 논리가 판을 칠까도 염려되고, 교류 협력을 통한 비핵화여야 되는데 도리어 평화통일을 통한 북핵 해결이라는 이런 희한한 희망적 사고가 판을 치는 일종의 극단적인 원 샷 해결 이런 것들이 가능하리라는 그런 헛된 믿음들이 한국 사회를 지배할까 대단히 염려됩니다.

그리고 설사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위시풀 싱킹(wishful thinking) 하는 대로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이것은 대단한 경착륙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반도에 장기적으로 미칠 악영향에 대해서 큰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까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도 한 달 전쯤에 유학생들 상대로 한국 와 있는 한 200명 모인 자리에 강연 갈 때 몇 가지 죽 추려보다가 이게 염려돼서 찾아보고 간 적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툭 질문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우리 정부 입맛에 맞게 대단히 중립적인 답변 하느라고 고민했습니다만.

장관께서는 8월 이래로 '우리의 입장이 확고해졌다' 이러지만 그때, ARF 때 발언 보면 '남중국해의 최근 상황을 우려한다'였고 그전의 대단히 중립적인 발언들, '중국과 동남아 관련국이 이미 합의한 행동선언의 완전한 이행과 조속한 행동수칙의 체결이 중요하다' 이 정도였단 말이에요, 대단히 중립적인. 중국과 동남아 관련국 사이의 자체적인 해결, 자체적인 규범 수립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제 염려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다음 단계로 나아가겠지요. 좀더 강화된 수준으로 나아갈 텐데 이런 것들이, 물론 현재 재균형정책의 핵심이 북핵보다는 도리어 남중국해에 가 있는 것은 저도 인정하는데, 미국의 주된 관심이. 이것이 몰고 올 위험성에 대해서 더 잘 형량을 하고.

다만 오바마 대통령이 기자회견 때 했던 말들은 외교적으로 대단히 불편합니다. '한국 바로 옆의 중국의 크기를 고려할 때 중국이 제멋대로 행동하며 법을 무시한다면 한국에도 좋지 않다, 그게 경제든 군사 이슈든.' 이게 사실은 대단히 어려운 말이지요, 어려운 말.

국제규범이나 국제법 질서의 준수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는 사람은 없지요. 다만 북핵 해결에 있어서 주변 강대국들을 마치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처럼 다뤄야 하는 한반도의 전략적 운명, 지정학적 숙명 때문에 저희들은 알고도 지금 이러는 겁니다, 알고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설득시키는 그런 외교안보적 비전,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대세의존형이고, 그다음에 현실에 대해서 지나치게 방어적으로 가는 외교안보적 비전들이 저는 속상하다는 말씀 드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6월 11일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WP하고 회견 하실 때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고 협상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 이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CSIS 연설에서 '위안부 문제에 진전이 있다면 의미 있는 한일 회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일본을 통한 아웃소싱, 북핵 해결에 대해서는 중국에 아웃소싱 하는 측면이 많았다면 한일 간의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을 통한 아웃소싱 전략이 상당 부분 진행되어 왔는데 이것은 이제 더 이상 실패한 겁니다.

도리어 일본이 미국을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고 역사로부터 자유로운 한일 관계를 맺어가고 또 한미일 동맹의 일체화를 추구해 나가는 그런 방식의 아웃소싱이 득세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지난번 추석 때 일본 외무성 초청으로 몇 박 며칠 다녀온 적 있습니다만 가서 만나고 싶은 사람 비공개로 다 만났어요, 원해 가지고.

제가 받은 인상은 우리는 일관되게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배상이라는 어찌 보면 현실과는 조금 동떨어진 지나치게 높은 목표를 추구해 왔고, 그런 것들이 대다수 회담의 전제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 왔고, 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까지 이미 오픈시켜 놨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일본은 제 느낌은 형식적인 회의체나 협의체 정도로만 보상되는 방식으로 한일 정상회담을 충분히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들을 많이 피력하더라고요. 입 다물었습니다만 저

도 비판적으로 접근하고.

우리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교안보적 비전에 대한 설계, 회담의 전제에 대한 조건에서 이것도 저는 실패했고 또다시 국민들한테 실망감을 줬거든요. 그것을 지극히 염려합니다.

답변하시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군대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정부 변화에 관계없이 모든 정부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서 나름대로 진전된 부분이 있고 또 아직 더 다듬어야 될 부분들도 있습니다.

다만 이 시점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측면에서 기왕이면 국교정상화 50주년 계기에, 특히 또 한중일 3국 정상회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 측에서 진정성 있는 조치를 취한다면 훨씬 더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하여튼 여야 관계없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 한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만은 각별한 의지를 갖고 현재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재천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나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이주영 위원님 말씀하실 게 있으시다 그러셨는데 말씀하십시오.

○이주영 위원 질의는 제가 서면으로 제출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아까 회의 시작 무렵에 한중 FTA 공청회 개최 계획안을 처리하셨는데 제가 그때 이 자료를 잘 못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2차 공청회가 '한중 FTA의 보완 대책'으로 되어 있는데 진술인이 네 사람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FTA센터장,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또 산업연구원 실장, 또 중소기업중앙회 부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중요한 피해그룹으로 볼 수 있는 수산업 분야가 빠져 있어요. 수산인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우리 외통위에 대해서 엄청 섭섭해 할 겁니다.

그래서 균형 있게 하기 위해서 진술인에 수산인을 한 사람 추가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위원장 나경원 예, 이 문제는 여야 간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권 간사님은 심윤조 간사님과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해서, 추가 진술인 우리가 특별한 의결 없어도 가능하겠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예.

○위원장 나경원 그러면 이 문제는 두 분 간사님들께 위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 안건 심사와 관련해서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김세연 위원님, 원유철 위원님, 김한길 위원님, 정병국 위원님, 김성곤 위원님, 김태호 위원님, 심윤조 위원님, 이해찬 위원님, 박상은 위원님, 정세균 위원님, 심재권 위원님, 신경민 위원님, 이주영 위원님, 원혜영 위원님, 최재천 위원님, 김영우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체토론을 마친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고 법안 및 비준동의안 등 22건의 안건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예산안에 대한 소위 심사 시에 금년도 재외공관 국정감사 과정 중에 각 공관에서 건의한 사항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셔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안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상정하지 않은 양창영 의원 대표발의 재외국민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 경우 이 안건과 직접 관련된 5건의 재외국민보호법안이 이미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바로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님과 심윤조 법안심사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의 예비심사기간이 예결특위 예산안 상정일인 10월 28일 오전 9시 30분까지로 지정되어 있는 만큼 그전까지 우리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종료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윤병세 외교부장관, 황부기 통일부 차관, 박찬봉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및 각 산하기관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전체회의는 10월 23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제1차 한중 FTA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하고, 내일 오후 2시에는 외교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한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가 예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 산회)

○출석 위원(16인)

김성곤	김세연	김영우	김한길
나경원	박상은	신경민	심재권
원유철	원혜영	이재오	이주영
이해찬	정병국	정세균	최재천

○청가 위원(3인)

김희정	심윤조	윤상현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전문위원	배용근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외교부

장관	윤병세
기획조정실장	김형진
동북아시아국장	이상덕
남아시아태평양국장	강영훈
북미국장	신재현
유럽국장	박철민
국제기구국장	유대종
재외동포영사국장	이명렬
다자경제외교국장	김영준
양자경제외교국장	천준호
북핵외교단장	김건
평화외교기획단장	권용우
감사관	이상욱
의전기획관	이정일
조정기획관	여승배
외교정보관리관	오승용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김영목
상임이사	김인

한국국제교류재단

경영이사	김광근
교류이사	윤금진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조규형
기획이사	최동준

통일부

차관	황부기
기획조정실장	최보선
통일정책실장	천해성
정세분석국장	임병철
교류협력국장	김남중
남북협력지구 발전기획단장	이상민
남북회담본부장	김기웅
통일교육원장	이금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장	한기수
통일준비위원회사무국장	서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사무처장	박찬봉
기획조정관	김점준
통일정책자문국장	신용운
위원활동지원국장	신은숙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	손광주
상근이사	박중윤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장	김웅희